

통일연구원

200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연구요약집

## 2008 연구요약집

2009년 2월 6일 인쇄  
2009년 2월 10일 발행

발행인 서재진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기획조정실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Tel 02-901-2521 Fax 02-901-2541  
<http://www.kinu.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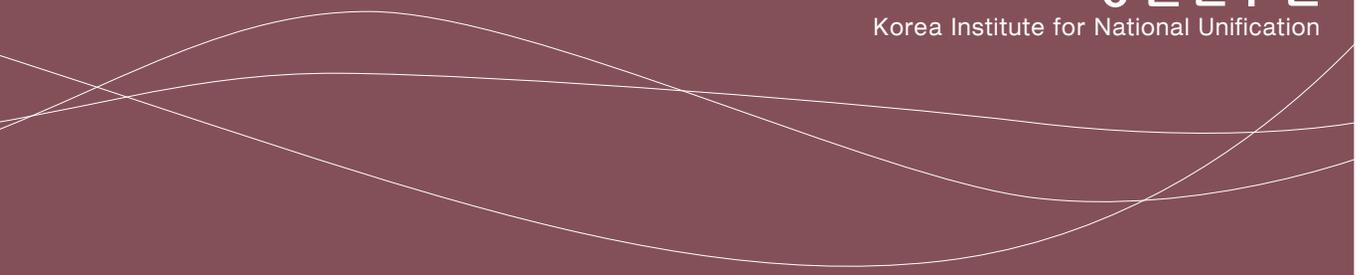
기획디자인 NEULPUM\* (주) 늘품플러스  
Tel 070-7090-1177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발간사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원은 통일문제 연구와 정책개발, 국내외 연구기관·단체와의 공동연구, 통일관련 자료의 출판을 비롯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난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통일 연구의 대내외 환경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상생·공영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금강산·여성관광객 피격사망사건과 개성관광중지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로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였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후보였던 오바마를 새 대통령으로 선택하였고 일본은 후쿠다에 이어 아소다로 총리가 새 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가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은 계속되었고 올림픽은 그 정점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북한은 통미봉남, 통민봉관 전술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통일연구의 환경 속에서 통일연구원은 “북한·통일 문제 연구의 선진 Think-Tank”를 기관의 비전으로 삼고 시의성과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 연구진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학술회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관련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축적된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통일연구원 2008 연구요약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올해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남북한의 상생·공영과 한반도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분단 해소와 통일에 대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일연구원은 통일대계(Unification Master Plan) 연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를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비핵·개방·3000 구상을 구체화하는 연구에도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지향적·통일지향적인 새로운 남북관계를 창출하는 작업에도 힘쓰겠습니다.

급변하는 통일환경 속에서 국정연구기관으로서 통일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기대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북한·통일 문제 연구의 선진 Think-Tank로 거듭나고 나아가 선진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

통일연구원 원장 

# Contents

## 발간사

### 1 연구원 개요

비전·중점목표	10
설립근거·설립목적·주요기능	11
2009년도 조직도	12
연구사업추진 기본구도	14
2008년도 연구사업 내용	15

### 2 2008년도 연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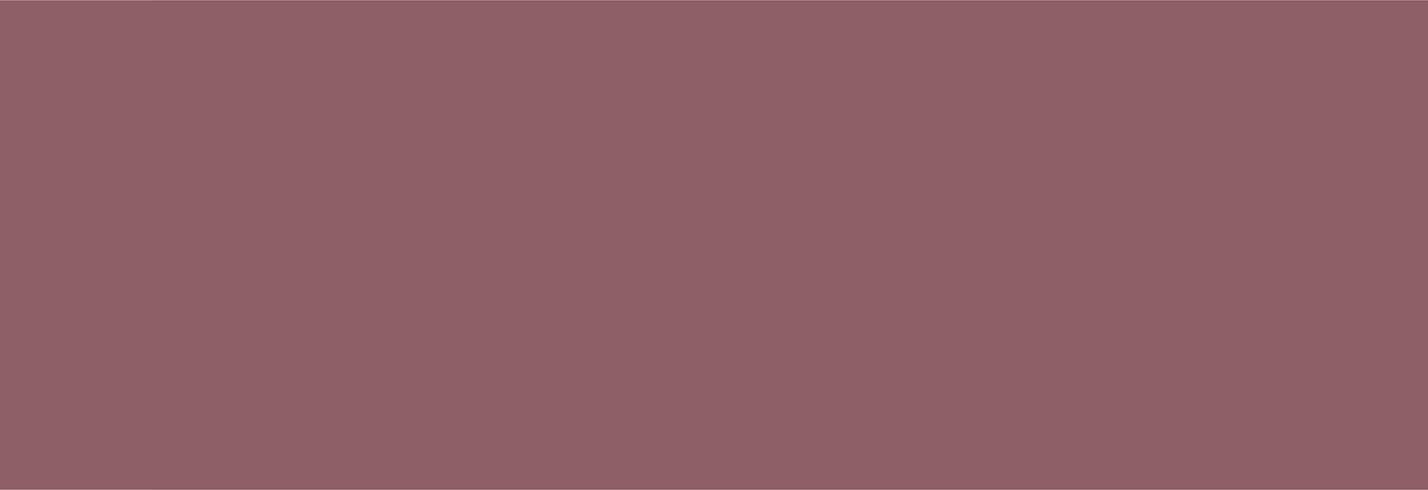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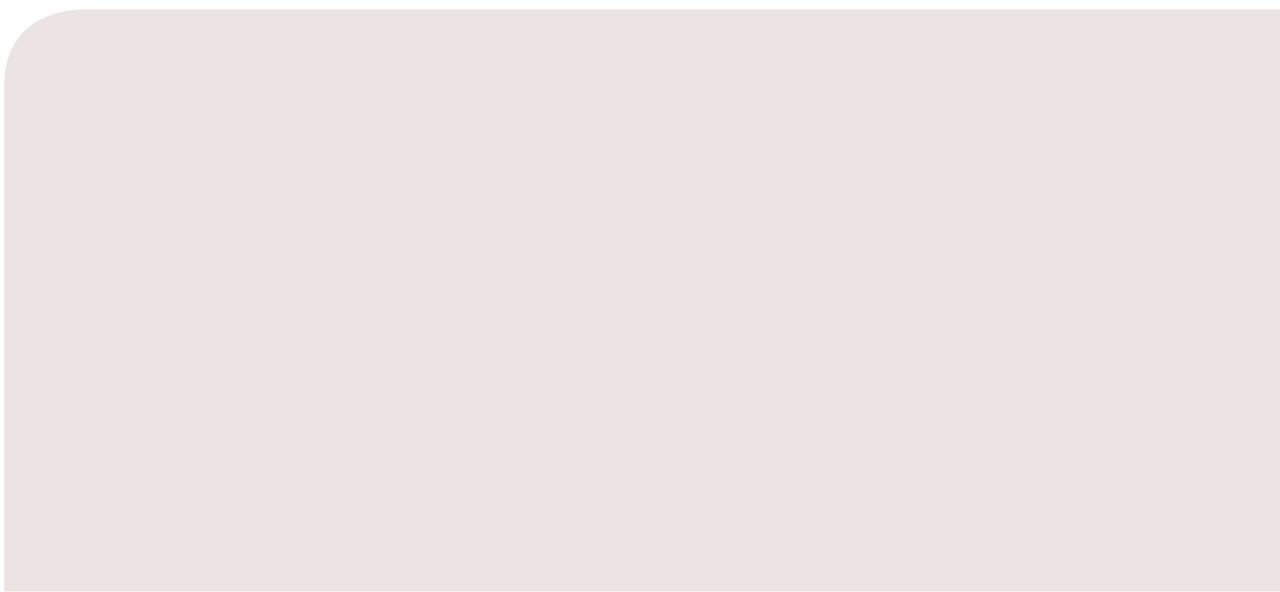
통일정책연구부문	21
남북협력연구부문	27
북한연구부문	41
국제관계연구부문	61
북한인권연구부문	87
협동연구부문	103
수시연구부문	121

### 3 2008년도 연구관련사업

국내학술회의	164
국제학술회의	165
국내외워크숍	166
KINU 라운드테이블	170
초청세미나 및 자문회의	171
해외전문가 방문간담회	175
통일문제연구협의회	176

### 4 부록

2008년도 발간물 목록	180
2009년도 사업계획	184
2009년도 연구위원 현황	185



# 1

## 연구원 개요

비전·중점목표 | 설립근거·설립목적·주요기능 | 2009년도 조직도  
연구사업추진 기본구도 | 2008년도 연구사업 내용

# 비전·중점목표

## ● 경영비전

북한·통일 문제 연구의 선진 Think-Tank

## ● 중장기 경영목표

- 연구보고서의 질 제고
- 연구인력의 전문성 심화
- 연구결과의 확산 극대화
- 정부정책 개발 선도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즐거운 일터, 보람느끼는 일터

## ● 중점목표

- (연구)연구질의 개선
- (연구)정부정책 개발선도
- (연구)네트워크 확대와 통일연구 허브기능 강화
- (연구)연구결과의 확산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 (경영)고객·미래지향적 연구기획체제 구축
- (경영)연구지원 기능 강화
- (경영)기관장 리더십 및 구성원 셀프 리더십 강화
- (경영)즐거운 일터, 보람느끼는 일터 조성

## 설립근거·설립목적·주요기능

### ● 설립근거

- 1990. 8. 1 「민족통일연구원법」(법률 제4241호) 제정·공포
-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 제정·공포  
통일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 2005. 7.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일부개정법률」(법률 제5733호)  
공포에 의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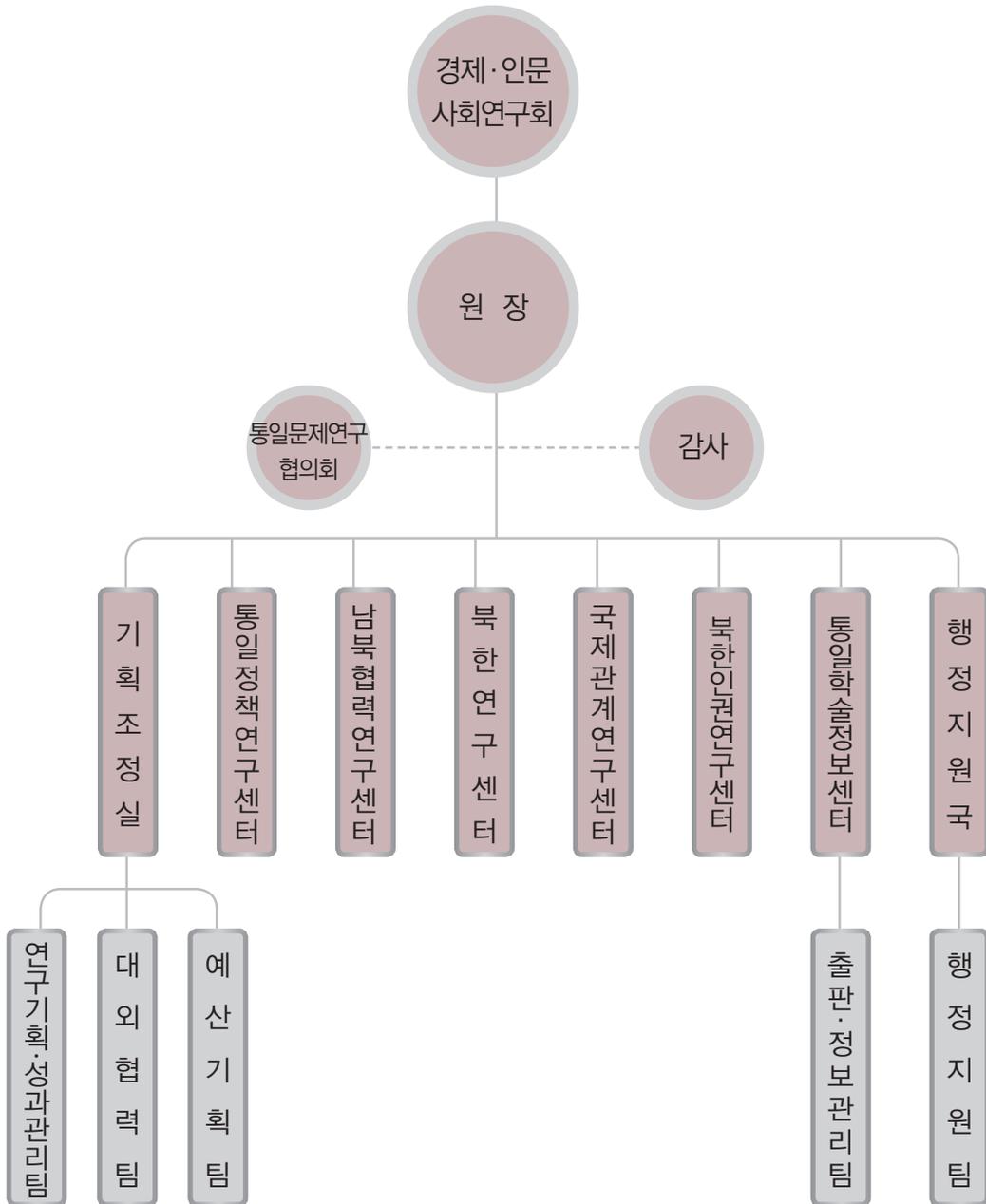
### ● 설립목적

- 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기능

- 북한·통일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 북한·통일관련 정보·자료의 종합관리 및 지원
- 국내외 연구기관·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및 연구용역의 수탁
- 이상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009년도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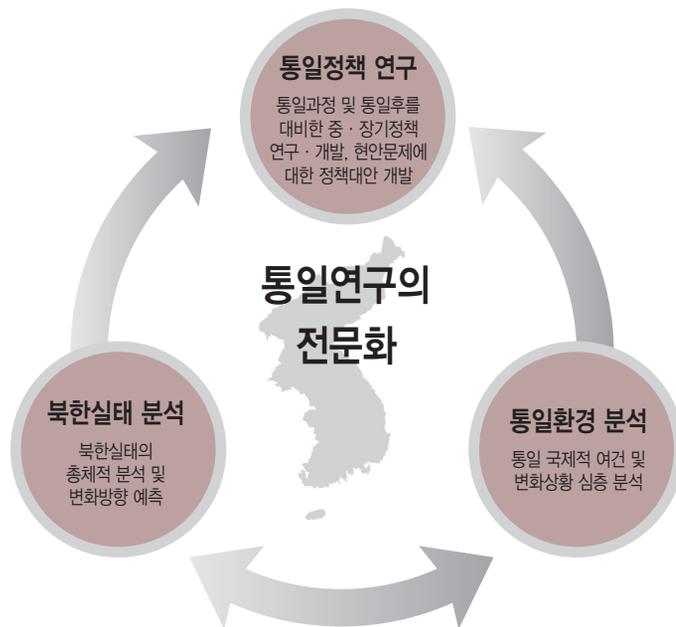
## 부서별 업무분장 (1실 6센터 1국)



# 연구사업추진 기본구도

연구원은 개원 이래 정부의 통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연구의 전문화 추진

- 북한실태·통일환경·통일정책 연구의 3개 부문이 3위 1체가 되도록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 연구를 수행
- 통일정책 연구부문에서는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정책 연구·개발과 통일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개발을 진행
- 북한실태 연구부문에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실태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
- 통일환경 연구부문에서는 동북아를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여건과 정세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



## 2008년도 연구사업 내용

구분	부문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고유 연구	통일정책 연구부문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남북협력 연구부문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 관계 발전 방안 모색	임강택 외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절차 개선 및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운
	북한 연구부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국제관계 연구부문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대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중국의 한·중 FTA 추진 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북한인권 연구부문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이금순 외	
협동 연구 과제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외 6개 과제	박형중 외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 방안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 방안 외 3개 과제	김국신 외
	동북아 4국에 대한 실용외교와 북핵문제	동북아 4국에 대한 실용외교와 북핵문제	김국신 외
수시 연구 과제 (121)	KINU정책연구 시리즈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외 2개 과제	서재진 외
	통일정세분석 보고서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외 11개 과제	정영태 외
	학술회의 총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외 1건	KINU
	동향분석 보고서	연례정세전망보고서(연간)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반년간) KINU insight(수시) 월간 북한동향(격월간)	KINU
	온라인정세분석	북핵, 오케스트라 선율을 타는가 외 71건	KINU
	주간 통일정세	주간통일정세(2008.1.1.~1.6) 외 50건	KI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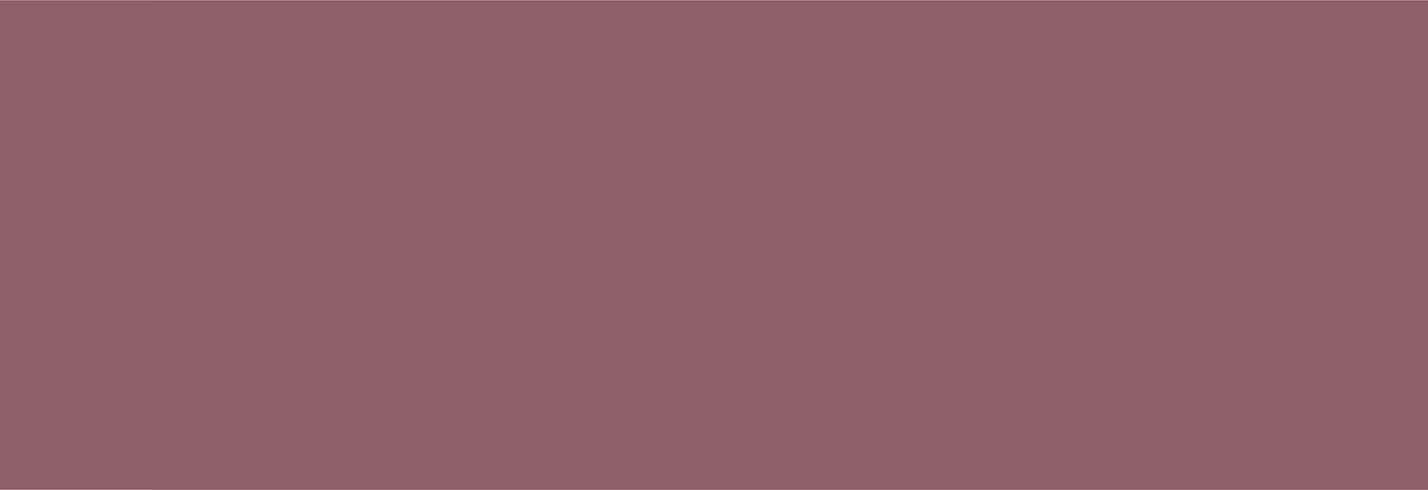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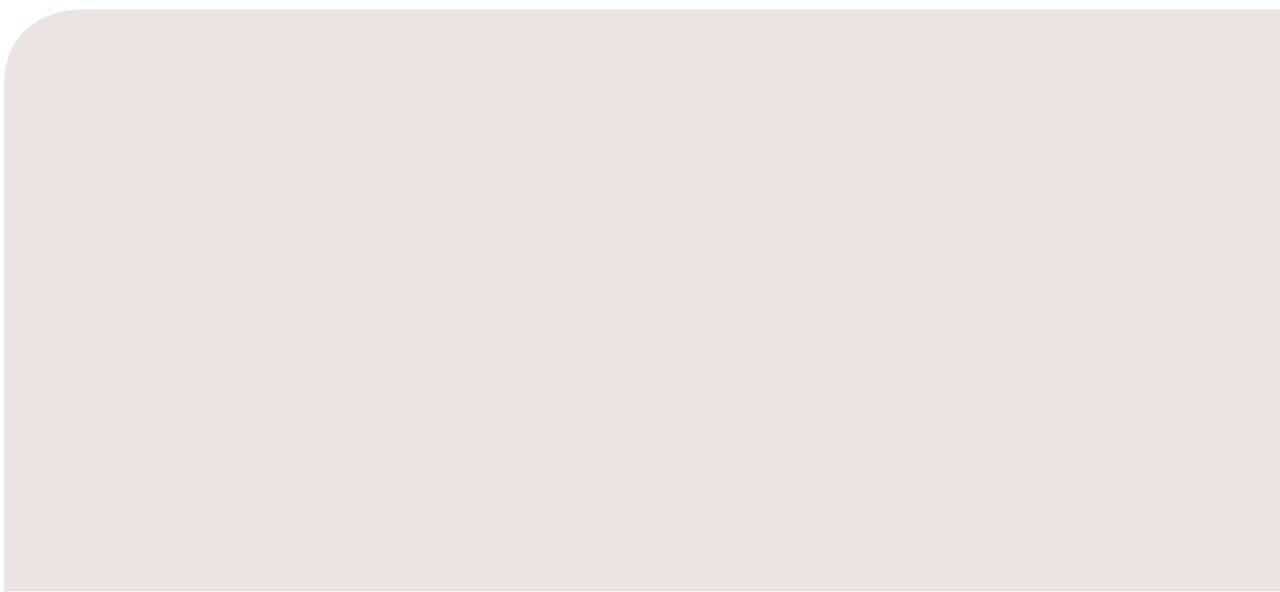
## 연구관련사업

구분	내용
학술회의 및 국내외 교류협력체제 구축	국내학술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국제(미·일·중·러·EU 등) 및 국내 전문가 워크숍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보고서 영역사업	Studies Series(영역과제) 발간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KINU Round Table	북한·통일분야 현안관련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 초청토론회
학술지발간	국문논총(2007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선정) - 「통일정책연구」, 연 2회 발행
	영문논총(2008년 12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1차 평가 통과)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연 2회 발행
정세보고서	KINU 연차보고서, 통일정세분석보고서, 연례정세전망보고서 발간
출연연구기관 정책화 형성	출연연구기관 협력사업 및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운영

## 연구지원사업

구분	내용
연구원 대내외 홍보	연구성과물 대내외 홍보
	기관 홍보 운영
통일 및 북한관련 학술정보서비스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유지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관리·배포
보안 및 통신망 서비스 고도화 사업	원내 보안시스템 강화 및 통신망 서비스 개선
사이버 북한정보자료센터 구축	사이버 북한상황실 구성·추진
경영혁신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및 경영혁신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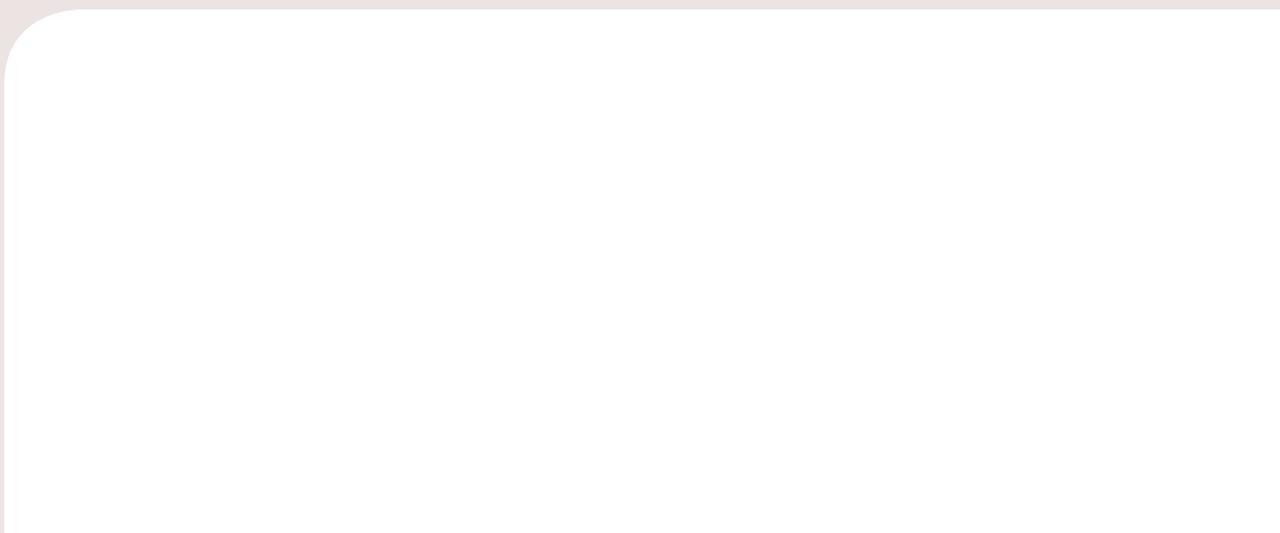




# 2

## 2008년도 연구사업

통일정책연구부문 | 남북협력연구부문 | 북한연구부문  
국제관계연구부문 | 북한인권연구부문 | 협동연구부문 | 수시연구부문



# 통일정책연구부문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성훈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민 (통일정책연구실장), 허문영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세부 실천방안들을 북핵문제 진전을 기준으로 4단계 (핵 동결 및 봉인, 핵 불능화, 핵 폐기, 핵 폐기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I 필요성과 목적

2007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고, 2008년 1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다. 두 정부는 2012년까지 4년 동안 공존하게 된다. 두 정부의 공동과제는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네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질문은 앞으로 오바마 정부의 출범이 비핵화, 남북관계, 북미관계 진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이다. 둘째 질문은 오바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북한은 대내 상황과 내부 정책은 어떠한가, 또한 대외·대남 정책에서 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이다. 셋째 질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은 어떠한가, 어떠한 문제를 잠재하고 있는가 또한 그에 대한 한국에 제기하는 전략적 문제점은 무엇인가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질문은 이와 같은 상황의 맥락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내용과 목적, 추진 원칙 등은 어떠한가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서술을 종합하여, 시사점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 II 주요내용

2009년 1월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는 초당적 중도 현실주의 노선의 외교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적절한 위상을 승인하게 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이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 하에서 북한에게 비핵화 압박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관여증대, 포괄적 협상, 상호주의 거래의 3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될 것이다. 또한 5단계에 걸쳐 미북간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핵화 단계를 진행시킬 것이다. 즉 불능화와 신고의 단계의 종료, 제3단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정책원칙 문서의 작성,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의 핵무기 및 물질의 양도와 북미정상회담, 북한의 핵 무기 완전 포기 및 평화 협정의 서명이 그것이다.

북한은 2000~2005년의 상대적 개혁 정책기를 거쳐 2006년부터 보수적 재집중화 정책을 취해오고 있다. 앞 시기의 주도 인물이 이제강과 박봉주였다면, 현 시기의 주도 인물은 장성택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노선은 2009년 이후에 김정일 건강 이상에 따른 정치 불안정 요인, 세계 금융위기와 내부경제정책에 의한 경제사정 악화의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뚜렷한 자세변화를 보일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핵 무기는 북한의 정권 안보의 최후의 보루이자, 내부적으로 자신감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정책에서 북한은 개혁없는 개방정책을 확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핵 보유의 기반위에서 실리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대남 정책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남한 배제를 계속하는 가운데, 중기적으로는 남북대화를 수용할 가능성과 중장기적으로 정경분리형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도 말에 북한 핵문제가 검증문제로 담보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2008년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간 신고문제에 대한 합의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이 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신고를 했느냐이며,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보장되는가이다. 한미가 원하는 철저한 신고와 불

능화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북한의 핵보유는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전략적 도전을 제기한다. 이에는 한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이 미비하다는 것,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해 대남협박을 할 수 있다는 것,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일본의 미군핵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 중국이 북한 핵을 활용할 가능성 등이 있다. 한국정부는 북핵의 역사적 중요성과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종합적인 국가전략에 토대를 둔 북한 핵무기 해법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핵 협상에서 '당근과 채찍'의 병행과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을 준수하면서, 한국의 분명한 지위와 역할을 확보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비핵개방 3000구상이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통하여'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원하여 10년 내 북한 경제를 일인당 국민소득(GNI) 3천 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 구상이다. 이처럼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 경제발전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안보불안이 해소되어야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남북한 상생·공영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추진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써 북한의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더불어 경제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보편적인 발전 궤적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지원하여 하나의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남북 상생·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추구한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를 추진하고 북한이 국민소득 3천 달러에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Ⅲ 목차

- I. 서론
- II.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1. 동북아 정책

2. 핵비확산 정책
  3. 대북정책
  4. 결론
- Ⅲ. 북한의 대내정책
1. 2000년대 권력 구도 및 정책 변화의 평가
  2. 주요 대내정치 과제와 도전
  3. 결론
- Ⅳ.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1. 대외·대남정책에서 북한의 의도
  2. 향후 대외·대남정책 방향
  3. 결론과 시기별 전망
- Ⅴ. 북한 핵문제
1. 불능화·신고 국면의 한계
  2. 북한 핵 개발의 전략적 문제점
  3. 결론과 한국의 정책 방향
- Ⅵ. 대북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1. 「상생공영」 대북정책의 비전 및 추진원칙
  2.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개념 및 정책목표
  3.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Ⅶ. 요약과 결론

#### Ⅳ 정책건의와 시사점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 및 북핵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외교 및 대북정책에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기존 양자 동맹 및 역내 다자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중국과 일본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며, 한국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북핵 정책에서도 미국은 보다 분명하게 북한 핵 보유 불용원칙과 북한 핵 폐기의 시급성과 중대성

을 강조할 것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내세울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확산 정책 일반론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포기와 베트남식 발전이나 아니면 국가붕괴나라고 하는 분명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대북정책을 중국 및 한국과 협력 추진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한당국은 당분간 대외 긴장관계를 표면상 유지함으로써 경제 위축으로 인한 내부갈등을 통제하려는 차원에서 대남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면에서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한국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 중기적으로 국제 금융위기와 현재의 반동적 대내정책은 북한 내부 문제와 갈등을 전반적으로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언젠가 대내 대남 정책을 전환해야할 불가피성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현존 정책원칙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운데, 북한당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한의 개혁을 촉진하고 한국 주도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전략과 방안을 세워놓고 대비해야 한다.

# 남북협력연구부문

▶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 남북한 출입제도(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김영운

#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규륜 (남북협력연구실장),  
조한범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질서 구축을 원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관계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민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 I 필요성과 목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색되기 시작한 남북관계는 미국의 대선시기와 맞물리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돌파구 마련이 어렵게 됨에 따라 당분간 불투명한 전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어 경제문제 해결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현 정부에게는 정책 수행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더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인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증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이명박 정부에게 힘겨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에서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다. 현 정부가 과거의 대북정책을 실패작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고, 핵심협을 막지 못했으며, 국민의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퍼주기식 지원’을 하면서 북한에 끌려

다닌 점, 그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켰으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심지어 핵실험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용과 생산성을 추구한다. 둘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도 유연하게 접근한다. 셋째, 국민 합의에 기반하여 투명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넷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로운 진전을 추구한다 등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에 대한 북한당국의 반발로 인하여 당국 간의 대화가 단절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설정에 있어서 기본 원칙을 고수하려는 현 정부의 입장이 도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당국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반발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고 협의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접근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II 주요내용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질서 구축을 원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관계 수립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고민을 담아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한반도 선진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 경제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일반에 대한 평가이다. 남북 경제관계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성과와 한계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남북 경제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3가지로 구성하였다. 경제통합이론, 체제전환이론 그리고 개발협력 이론이 그것이다. 경제통합이론은 남북 경제관계의 중장기적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체제전이론은 대북정책의 효과와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개발협력이론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써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인,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현실의 남북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기제로 제3의 대안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기제가 유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이론적 틀, 경제통합, 체제전환, 개발협력의 관점에 비추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좀 더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접근방법과 세부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 Ⅲ 목차

- I. 서론
  1. 문제제기
  2. 주요 연구내용 및 접근 방법
- II. ‘한반도 선진화’의 의미와 남북 경제관계
  1. ‘한반도 선진화’의 의미와 장점
  2. 남북 경제관계의 개념과 발전의 의미
- III. 기존의 남북 경제관계에 대한 평가
  1.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2. 남북 경제관계 구축 성과에 대한 평가
  3. 소결: 남북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
- IV. 남북 경제관계의 이론적 고찰
  1. 개발지원이론
  2. 체제전환국가의 경제발전이론: 체제전환전략을 중심으로

- 3. 경제통합이론
- 4. 종합적인 이론 틀의 모색
- V. 향후 5년 신정부의 남북 경제관계 구축방안
  - 1. 신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 2. 대북경제정책의 목표
  - 3. 주요 부문별 발전방안
  - 4. 핵심 과제별 발전방안
- VI. 결론

####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한반도의 선진화는 북한의 변화와 병행해서 추진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중국적으로는 제도적·물리적·정서적 분단의 장벽이 제거되었을 때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는 협력과 통합, 조화와 균형의 경제관계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 국민적 합의에 유의하면서 국민 여론의 선도적 역할 병행

대북정책이 국민적 지지 기반을 토대로 투명하게 추진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국민들은 제한된 정보 하에서 부분적으로 왜곡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에만 의지해서는 정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지금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적 통합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은 일반 국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남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통합을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정서를 얻는 노력과 함께 국민 여론을 선도해 나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나. 경제적 협력과 비경제적 협력의 연계 추진

과거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쟁국 간의 협력은 평화를 안정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경제적 격차가 큰 상황에서의 급격한 경제통합 역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비경제적 협력과 경제분야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이고 긍정적으로 작용해왔으며, 두 가지가 병행해서 추진될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평화정착을 촉진하는 작업 및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 노력과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소위, 경제적 협력과 비경제적 협력의 확대 재생산 구조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언젠가는 대화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최소한의 추진 동력을 관리해 나가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민·관 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제부문과 사회문화부문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다. 우리 사회의 변화 수용 능력의 제고

남북 통합의 과정은 한마디로 변화의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변화는 그 범위와 깊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적응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변화는 가능하면 북한

사회의 수용능력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 촉진을 통한 통합과 통일이라면 북한 사회의 변화 수용능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북한체제의 변화 결과와 남북한의 통합 과정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북한의 변화 속도와 통합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확대시키는 데 필요한 우리의 수용능력을 장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로는, ① 대북정책 관련 정치권과 국민들의 합의 기반 마련, ② 경제협력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 확보, ③ 북한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북한사회에 대한 적대감 해소, ④ 독자적인 국가안보능력 확보, ⑤ 우리 사회내의 갈등 해소 능력의 제고, ⑥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추진 및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 ⑦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남북 간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는 이외에도 무수히 많지만, 이 중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작업은 북한과의 화해협력의 중요성 및 관련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 남북한 출입제도(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책방안 연구



김영운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남북 사이의 3통 문제는 북한지역의 경제특구 건설과 함께 필수적인 남북한 간의 연결을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I 필요성과 목적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북한 당국의 허가를 증명하는 방북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방문초청장을 받기 위한 신청과 처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정변경은 아예 불가능하다. 출·입경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대북 투자에 임하는 남측 기업인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원가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사이의 출입제도, 통신을 포함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대폭 개선할 수만 있다면, 남북 쌍방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는 물론, 경험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특히 개성공단의 출·입경과 관련하여 들려오는 현장의 목소리는 제법 심각할 정도다. 개성공단 출·입경 제도와 관련, 경험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남북출입에 국내법과 국제규정 모두를 적용하니 정말 불편하다.”  
 “모든 것을 외국으로의 출국·입국과 같은 절차로 하고 있다.”  
 “출·입경을 왜 출입국 절차로 인정하여 관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임가공 물품의 수입면장 발부는 잘못된 것이다.”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개성공단 건설되는 과정에서 남한 당국은 통행 및 통관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 통행검사소 본 건물을 가동, 출입수속을 가속화하고, 출입시간대도 하루 3회에서 21회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지정 인원 및 차량에 대한 단독통행증 발급, 초청장 제도의 부분적 폐지 등 출입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시도했다. 출입신청 기간도 과거 30일에서 개성공단관계자에 한해서는 7일로 단축했으며, RFID(전자인식장치)를 이용, 통행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면 남북 출입사무소(CIQ)와 관리위원회 상호간에도 RFID(전자인식장치) 시스템을 통해 연계 방안을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직접 출입하거나 개성공단을 경유하여 대북 물품을 전달하려는 업체는 한 목소리로 남측 통행 절차의 불편성과 번잡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남북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무역협회가 2008년 1월, 2007년도 남북교역 통관실적이 있는 업체와 대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북 경험업자들의 대다수는 3통 문제의 해결을 남북교역 및 투자협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문제는 개성공단의 2·3단계 개발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도 제시하고 있다(절대 다수인 67%가 3통 문제의 해결을 지적).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교역 및 투자 관련 3통 문제는 그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대북 사업을 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물품의 주반출입 경로를 경의선이나 동해선 등 육로를 사용하는 것을 볼 때, 3통 문제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 II 주요내용

본 연구는 2007년 연구보고서,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를 보다 심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연구에서는 남북 물류·운송분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출입제도의 개선을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출입제도에 중점을 두어 그 개선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가 도달하려는 목표는 출입제도 개선을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북한의 개방이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행·통신·통관과 관련된 남북한의 법제 및 남북 사이에 체결한 합의를 분석했다. 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및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합의서가 3통과 관련,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협업체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문조사는 전문 설문조사 요원을 통해 2008년 9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30개 남북 경협기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주로 출입제도와 관련된 남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북한지역의 출입문제 파악을 위해서는 2007년에 필자가 해양수산개발원의 위탁을 받아 설문조사(2007.7.10~15)한 내용인 ‘북한진출기업의 물류활동실태 연구’ 결과를 활용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① 북한지역에서 투자 및 경협사업을 하는 기업, ② 북한에 진출하여 생산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나 중국, 단동 및 연길에 소재하면서 대북 물류분야에 진출한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모든 설문조사는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형태를 취했다. 먼저 남한의 출·입경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① 남북경협 추진시 3통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분야(통행, 통신, 통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가? ② 통행관련 또는 출·입경 시설 사용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함께, 출입제도와 관련된 절차, 출입절차의 시스템화 및 간소화 방안 및 개선해야 할 분야가 어떤 것인지, ③ 서류물자 반출입시 전략물자나 원산지 증명과 관련,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등이었다.

다음으로, 북한지역 3통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는 ① 북한 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방법 및 절차, ② 국외에서 북한 항만까지의 해상운송을 포함, 통관절차, 세관, 검역 등의 절차, ③ 물품의 수입조건 및 수송방법, ④ 수송수단 확보 문제와 항만 출입제도의 제한사항 여부, ⑤ 통관과정과 절차, 3통과 관련된 시설 상태 등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었다. 물론, 이 분야는 남북 사이의 출·입경과 관련된 직접적 연구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남북교역이나 인원 및 차량의 통행·통관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의 출입 제도를 파악해 본다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남북 사이의 출입제도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북한지역의 인프라 문제를 포함, 3통 관련 대내외 환경 등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다. 그 이유는 3통 문제에 대한 연구가 남북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지역 인프라나 정책을 비롯한 대내외 환경은 간접적 연구대상으로 필요부문에 국한하여 언급했다. 사례연구에서는 필자의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남북 사이의 3통 문제의 원활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제I장의 문제제기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남북 사이의 개선의 필요성과 현실 여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III장에서는 출입제도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IV장에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시사점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며, 제V장에서는 3통과 관련한 남북 사이의 출입제도 개선과 정착방안을 다루고 있다. 제VI장은 결론이다.

### Ⅲ 목차

- I. 서론
  - 1. 문제제기
  - 2. 연구방법
  - 3. 연구내용 및 구성
- II. 남북한 출입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현실 여건
  - 1. 출입제도 개선의 필요성
  - 2. 현 단계 남북출입제도 개선을 위한 여건 및 환경

- Ⅲ. 남북한 출입제도의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
  - 1. 통행 분야
  - 2. 통신 분야
  - 3. 통관 분야
- Ⅳ. 동·서독간 출입제도 개선 사례와 시사점
  - 1. 정책전환과 출입제도의 개선
  - 2. 제도개선의 내용과 의미
  - 3. 통행로 악용에 대한 대처
  - 4. 교통 분야 대동독 지원
  - 5. 통관 분야 협력
  - 6. 내국간 거래 인정 문제
- Ⅴ. 남북한 출입제도 개선 및 정착방안
  - 1. 남북한 출입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2. 남북한 출입제도 정착방안
- Ⅵ. 결론

#### Ⅳ | 정책건의와 시사점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와 대북 지원 물자의 증가 등으로 남북한 물동량은 지금까지 크게 증가해왔다. 남북교역은 남북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많은 부분이 육상수송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의선 등 철도·도로단절구간이 복원·개통될 경우 상당 부분 철도·도로로 전환될 것이며, 개성공단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남북한 육로 수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간 증가하는 육상 인적왕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건의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출입 관련 제도는 지나치게 대외교역 및 외국간 거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남북 사이의 통행·통관, 검역 등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결여되어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을 준용함으로써 출입업무처리에 큰 번잡성과 불편을 야기하

고 있다. 관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심사관련 부처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인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북교역 및 인적왕래에 대한 출입·관세·검역 사항을 민족내부거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은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내국간 거래에 따른 남북출입제도 정착 및 개선을 위해서는 관세, 통관절차 등은 국내 거래기준으로, 검역 등은 국제 거래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조치의 단기적 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역으로의 입·출입은 민족내부거래를 적용, 자유왕래 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남북출입관련업무의 상당 부분을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속한 출입소통과 편의제공을 위해 출입사무소의 직제를 개정, 출입심사공무원을 지정·총괄할 수 있는 지휘체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즉, 남북출입관리사무소 독립직제를 운영하는 동시에 남북출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남북출입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각 부처별로 관장하는 업무로 독립시키지 않고 각 부처업무가 하나의 통일된 체제 하에 관장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직제 하에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출입관리사무소 직제 규정을 신설, 통일부에서 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출입관리사무소 독립 직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출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각 부처별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동시키고 통합하여 출입관련 업무를 일원화(one stop service)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출입제도 절차, 출입시설 배치, 인적왕래 및 물류유통 등 교류협력시스템 측면에서 간소화 및 전산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함과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 대폭적인 제출 서류 단순화, 방북증 발급제도의 전환, 출입절차의 시스템화를 추진, 승인신청 창구 일원화 및 양식 간소화, 차량운행 및 통행 관련 절차 간소화 및 출입관련시설 첨단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타 북한지역 통행·통관 인프라 개선, 3통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인프라 연결 및 개선, 북한의 3통 분야 행정의 현대화 지원, 원산지 인정 및 전략물자반출과 관련된 국제협력, 내국간 거래의 국제인정 획득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은 중·장기 차원에서 추진, 남북한 출입제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지역의 경제특구와 남한을 연결하여 3통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고자 한다. 경제특구는 북한지역이지만 남한에 가까운 생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규모의 집단적 기업진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남측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북한지역 경제특구는 남한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바닷길뿐만 아니라 자동차 길, 철길이 만들어지고 통신으로도 연결되어, 이에 따른 물류교류와 인적교류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작은 규모라도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가 평양·남포지역, 더 나아가 신의주나 나진 선봉지역에 조성되면, 이들 특구들은 남쪽과 연결되고, 특구와 특구가 서로 연결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시설이 개발되고, 이것이 북한지역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바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남북 사이에 제대로 된 경제공동체 건설을 해야 한다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의 건설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이 모두는 공단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남한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창출이라는 이익을 우리에게 가져다준다. 남북 사이의 3통 문제는 북한지역의 경제특구 건설과 함께 필수적인 남북한 간의 연결을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북한연구부문

-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 ▶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 ▶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임순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기획위원), 박영자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

북한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이해하려면 정치 담론이나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제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생한 일상의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써, 정치적 권력과 지배관계의 작동을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고정적인 이데올로기 담론과 정치권력에 갇혀있는 듯 보이는 북한 사회의 역동적 변화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의 경제난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에 직면하여 '아래로부터' 진행된 북한 일상의 변화에 관한 자료를 계층별로 수집·분석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이 야기한 생존의 위협과 일상의 파괴하는 도전에 직면하여 존재의 안정과 새로운 삶의 방법을 모색해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세계의 특징을 탐색하고, 그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 I 필요성과 목적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양식을 뿌리째 흔드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후 십여년간 북한 주민들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다양한 생존 전략을 통해 경제난이 야기한 기아와 궁핍, 기본적 안전의 위협이라는 '비일상적' 충격을 자신들의 일상 속으로 흡수하면서 생존을 이어갔다.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의 공백을 시장이 대신했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중심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생산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거주하고 쉬는 방식, 국가, 가족,

이웃과의 관계,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통하는 틀과 방식도 변화하였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세계를 통해 경험한 변화들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해석과 확대·변형 과정을 통해 북한의 거시적 체계 및 제도의 변화와 연계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정치담론이나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제의 삶’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생한 일상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정치적 권력과 지배관계의 작동 을 그것들이 현실로서 구체화되는 삶의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고정적인 이데올로기 담론과 정치권력에 갇혀있는 듯 보이는 북한 사회의 역동적 변화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북한 연구는 주로 정책, 담론, 전략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시각에 있어서도 특히 구조 중심적, 정치 중심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 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거나 일상영역을 정치에 종속된 영역으로 취급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이루는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행위자 차원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일상생활세계에 관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일상의 변화를 탐색하고, 주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의 정치’가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 II 주요내용

근래 들어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사건은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이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추세 역시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난 이후,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되, 경제난 이전 시기의 일상생활과의 비교의 관점을 견지하였다.

II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양식을 하루 일과와 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영위하는지를 추적하여 기술하는 생활시간연구를 통해 경제난을 전후로 해서 노동과 여가시간, 직장에서의 노동과 사적인 개별노동 시간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계층별로 어떤 차이점과 공

통점이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의식주 생활의 계층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월 평균 소득에 따라 구체적인 식생활, 의생활, 주거생활 실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III장에서는 경제난과 그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계층, 직업별로 구분되는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존전략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모습을 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일상을 위협한 경제난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뒤이은 시장의 확산을 북한의 주민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는지, 경제난 이후 십여년의 시간을 경유하면서 구조적 변화의 충격이 주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은 각기 어떠한 전략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재구축해 나갔는지에 주목한다.

경제난 이전 시기의 북한의 계층구조는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기준에 의한 계층구분보다는 성분이라는 정치적 잣대에 의해 구분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과거에 정치적 측면에서 고착되었던 사회계층구조가 경제난과 더불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분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닌 전체 생산관계 속에서의 위치와 직업, 사회정치적 지위를 중심으로 노동계층, 지식인계층, 권력엘리트계층, 신흥상인계층 등으로 나누어 이들 집단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또한 계층을 망라해서 현재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일상생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각 계층별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거시적 사회 구조의 변화와 관련성을 갖는 사회계층의 변동,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통제와 일상의 저항, 주민 의식의 변화라는 네 가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변화가 구조적 변화에 주는 영향을 탐색하고, 북한 체제 변화의 동력으로서 일상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 III 목차

-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 II.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양식
  - 1.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
  - 2. 북한 주민의 식의주
- III. 키워드로 보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1.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비법, 생존, 일당, 브로커
  - 2. 지식인계층의 일상생활:
    - 부업, “거두매”, 지식 판매, 비법과 뇌물, 공동생산과 직업세
  - 3. 권력엘리트계층의 일상생활: 제도기생
  - 4. 신흥상인계층의 일상생활: 경쟁, 범죄, 뇌물, 규칙 변화
  - 5. 여성의 일상생활: 부양, 출혈노동, 여권, 자립, 차별, 홀로서기
- IV. 일상생활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 1. 계층 구조의 변동
  - 2.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
  - 3. 통제와 일상의 저항
  - 4. 국가에 대한 불신과 금전만능주의 심화
- V. 결론

####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 국가권력의 지배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은 저항보다는 동의와 순응 쪽에 치우쳐있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는 그러한 스펙트럼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의 주민들은 직장일에 충실한 대신 근무시간을 유용하면서 개인 장사에 몰두한다거나, 관계망과 뇌물을 활용한 비법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거나, 믿을 수 있는 친지들끼리 모여서 정치적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단속 대상인 남한의 대중문화를 비밀리에 향유하는 등 자신들 나름의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간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권력의 지배질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일상의 이중성이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의 양상이 반드시 북한 체

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주민들이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회적 일탈행위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생계 보조와 고용 창출, 심리적 불만 해소 등의 사회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비공식적, 비합법적 활동과 행위들을 일정한 한계 내에서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이 지나치게 확산되어 체제전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제도적 규제를 가한다. 북한 당국이 사회경제적 난국 타개를 위한 정책 전환 없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기치로 한 체제 결속과 내부 동원을 전면에 내세운 2009년은 북한 주민 일상의 이중성과 이를 조절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해가 될 것이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의 변화 속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지표들, 예를 들어 계층 구조의 재편, 사회 통제와 주민들의 대응, 주민 의식의 변화 등은 북한의 정책 변화 및 체제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내부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데 있어 정치적 변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요소들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의식 및 일상생활의 변화에 관한 계량적, 정성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중장기적 변화 추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수영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북한은 미국과의 ‘핵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신단결’을 강조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는 더욱 제한 될 것이다. 특히 외부의 대북 압박은 구성주의적 및 복잡계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일과 그의 막료들의 독재체제 유지와 개혁·개방 거부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I 필요성과 목적

‘비정상적 불량국가’인 북한도 국제사회의 일개 정치적 행위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외부로 나타난 다양한 행위는 북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현상’이다. 이들 ‘현상’은 북한의 ‘본질’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지만 ‘허상’이나 ‘가식’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상들’을 모르고는 북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연구를 위해서는 ‘북한현상’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과제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now and here)’ 정확히 파악, 기술해 내는 것이다. 미리 예단을 하거나 선택적 인식(selective cognition)에 의해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 기술하는 것은 현상을 올바르게 보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현상은 이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등 다방면적인 것이고 그것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이한 주체에 의해 만들어 진다. 그러나 각이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의 정점에는 김정일이라는 최고권력자가 자리잡고 있다.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이 북한을 ‘독특한’ 국가로 취급하는 데서 보듯이 김정일 유일 지배체제하에서는 그의 언행이 곧 ‘북한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바로 이것이 또한 ‘북한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미국의 ‘김정일정권 붕괴 전략’을 방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

김정일 유일지배구조와 관련, 구조는 민중의 힘에 의해 타파될 수 있다는 것이 마르크스 구조주의의 전제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구조는 비록 미미한 시장적 요소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에게 비스켓’ 정도일 뿐, 유일구조의 견고성은 매우 강하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구조는 김정일과 그의 충신들, 권력기구, 권력하부 기구, 피동적 민중 등이 수직적으로 일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최소한 4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것으로서 하나의 정형화된 구조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 구조 내에서 유일한 자유변수는 김정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구조가 아무리 ‘유일구조’라 하더라도 이미 구조화된 이상 그 구조를 이루는 개체들과의 상호 작용속에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김정일이 발하는 모든 현상은 내·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에 의해 발현된 현상은 주민들에게 부딪혀 feed back이 된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에는 공식적인 환류기제가 부재하(있다고 해도 미미한 정도)지만 각종 정보기관에 의해 인민들의 의견이 김정일에게 입력되고 있다. 따라서 유일구조 자체는 매우 경직적이지만 구조를 이루는 각 주체들의 역동성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7·1조치’로서 이는 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밑으로부터의 변화요구를 김정일이 수용한 것이었다.

이제 서두에서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북한적 구조하에서 김정일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 구조가 내진설계가 잘되어 있어서 리히터규모 8.0이 넘는 강진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1.0~2.0 정도의 가벼운 지진에도 쉽게 넘어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선전물처럼 내놓아진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북한내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를 천

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북한현상을 고찰함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북한 국내 구조보다 훨씬 더 큰 국제구조이다. 국제구조는 현 북한구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사적 냉전구조는 끝이 났지만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구조가 잔존해 있고, 이러한 구조적 제약은 단시일내에 청산될 것 같지 않다. 이로 인해 견고한 북한의 내적 구조는 쉽게 연성화되지 못하면서 더욱 강성화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북한현상이 세계구조만의 탓으로 돌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 북한은 국가적 자율성 차원에서 보다 개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폐쇄적인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북한현상이 주변 환경과 깊은 연동성을 가지고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간과된다면 현재 북한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향후 북한현상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큰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한현상을 구명함에 있어서 북한내부 요인의 상호작용은 물론 북한과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도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라는 외부요인 때문에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수단으로 ‘선군정치’를 도입했다는 점이며, 각종 ‘북한현상’의 분석을 통해 이를 증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계는 역시 북한현상을 적시함에 있어서 현상학(Phenomenology)의 대가인 후셀(Husserl)이 주장한 주관성, 판단, 선입관 등이 완전 배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현상은 상당부분 우리의 인식구조를 통해 정리된 정보일 것이고 북한의 공식문건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장성이 있는 영상자료까지도 북한의 의도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현상을 규정하는 수많은 요인 모두를 분석변수로 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요인을 선택하느냐는 것도 주관과 경험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인할 수밖에 없다.

## II 주요내용

모든 행위의 주체는 생존을 위해 도전에 대해서 끊임없는 응전을 한다.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각 주체는 내외적 도전에 대해 때로는 순응기제를 통해, 때로는 반항기제를 통해 자신을 보존해 간다. 인간에 의해 운용되는 국가도 생존을 위해 다기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대체로 국가의 생존방식은 엄청난 크기의 힘을 키우든지 아니면 조그만 힘들을 결집하든지 하는 것이다.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의 독자적 힘으로 생존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합종(合從)이나 편승을 하여 생존의 길을 모색한다.

일반적 기준에 의거하면 북한은 약소국이다. 경제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국토의 크기, 인구, 문화, 군사력의 질 등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없는 국가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미국이라는 최강국가와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고한 연합을 이루든지 아니면 미국에게 편승해서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북한은 약소국이면서 철저히 독자적 힘으로 세계최강 미국과 대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획득하는 등 대미 '승리'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이러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강력한 수직적 유일지배체제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봉쇄정책을 통해 일체의 반대의견이 표출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는 단일한 목소리와 의견만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분리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북한의 이러한 힘이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강대국과의 경쟁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강대국과의 오랜 동안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성이 길러졌고, 대강대국 '요리법'을 터득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노하우를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십분 활용하였다. 이러한 행위 주체간 상호작용에 의한 행동결과를 중시하는 이론이 구성주의나 복잡계이론이다. 이 이론들은 어떤 패턴화된 변수만을 고려하여 행위를 분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행위패턴을 도출해 내려 하였다. 특히 복잡계 이론은 '주어진 사실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까지 고려하여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목적자체는 좋지만 과연 보

이지 않는 변수까지, 비록 보이더라도 유용한 변수인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고 또 다른 선입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잡계 이론은 아직까지 완전히 적용된 그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의식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촉구일 뿐이다.

이런 이론적 전제를 두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북한의 오늘은 철저히 미국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속에서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매우 중요하고 거의 독립변수처럼 역할을 하였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율성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형국은 아니었고 이에 대해 ‘합리적’ 응전을 함으로써 현재의 북한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 북한현상은 체제생존을 위해 가장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다. 강력한 1인지배체제, 장군-당-군-인민간 일체화, 사회통제 체제 등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미국을 상대하는 데에는 ‘최적의(optimal)’ 조합이다.

첫째, 정치적으로 북한은 김정일 ‘장군’ 과의 ‘일심단결’을 강도높게 강조하고 주민들은 물론 권력엘리트들까지 일점일획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김정일의 와병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경제적으로 북한은 7·1 조치 이후 시장에 대한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제난에 대한 주민불만을 무마하였으나 오히려 인플레이션,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초래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이 무력화되자 시장통제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유시장적’ 요소를 척결하고 본래의 농민시장 기능만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셋째, 대남 및 대외적으로는 대북 포용정책을 구사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대남 유화정책을 구사하여 각종 대화를 지속하였으나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대남 강경책을 구사하여 각종 대화를 거부하고 ‘김정일 교시’ 사업인 개성공단까지 약화시켰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철저히 ‘맞대응(tit for tat)’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미국의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강경책으로 온건책에 대해서는 온건책으로 맞서왔다. 그 매개체는 핵무기였다. 미국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로서,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인 핵무기 개발을 수단으로 미국을 몰아 부쳤고, 마침내 테러지원국 해제를 받아냈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분석·전망하면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왔다.

### III 목차

- I. 서론
    - 1. 연구 목적
    - 2. 연구를 위한 분석틀: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접근
  - II. 정치 분야 정책
    - 1. 북한의 대미 인식과 정책
    - 2. 과거 5년간 북한과 미국의 상호관계
    - 3. 미국에 대한 응전으로서의 담론 및 김정일 정권 강화
    - 4. 향후 정치분야 정책 전망
  - III. 경제 분야 정책
    - 1.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 2. 사회주의 경제관리 개선
    - 3. 2000년대 북한의 경제상황과 변화
    - 4. 향후 경제분야 정책 전망
  - IV. 대외 및 대남 분야 정책
    - 1. 대외 및 대남관계 변화 추세
    - 2. 대외·대남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
    - 3.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 결정 과정
    - 4.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방향
    - 5. 향후 대외·대남분야 정책 전망
  - V. 결론
- 〈부록〉 노동신문에 나타난 선군관련 정론·사설·논설

###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향후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해주고 '정상국가'로 만들 의지와 플랜이 있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보수·진보 어느 쪽도 북한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은 것 같다. 즉, 미국이 '사이비종교국가'인 북한을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바마 행정부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 북한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연관지어 전망하자면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의 진로는 핵개발 지속일 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 체제 유지가 지상과제인 북한으로서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량살상 무기 개발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북미관계는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는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향후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대남 정책도 철저히 '맞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 미국을 하나로 보고 있는 북한은 '주군'인 미국과의 대화만 성공적으로 이끌면 남한은 자동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미국이 북미대화를 진행하면서 남북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느냐이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과의 '핵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신단결'을 더욱 강조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내부 정치적·경제적 자유는 더욱 제한 될 것이다. 특히 외부의 대북 압박은 구성주의적 및 복잡계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일과 그의 막료들의 독재체제 유지와 개혁·개방 거부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북한연구실장), 김국신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형중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차문석 (통일교육원 교수),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지난 20년간 경제·사회적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여 온 북한의 앞길을 전망하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북한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북·미관계는 북한체제의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 I 필요성과 목적

북한체제의 안정성은 1990년대 초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오래된 연구주제이면서도 북한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중의 하나이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 기아사태와 탈북이 이어지던 1990년대 초·중반 북한체제의 붕괴가 임박한 것이라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그러나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생존을 이어갔다. 오히려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외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 붕괴론 보다는 북한체제의 내구력을 설명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다. 북한 붕괴 대비에 집중하던 대북정책은 극적으로 반전하여 지난 10년간 '북한이 변화하였다'와 '북한체제는 안정적이다'는 두 가지 전제 하에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으며 보다 객관

적이고 심층적인 방법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전망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통일연구원에서 출판된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와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는 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 등 5개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 및 측정항목을 고안하여 하나원에서 교육중인 새터민 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방법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저자들도 인정하였듯이 응답의 신뢰성과 샘플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념 등 5개 영역의 설정과 영역별 지표의 선정 기준 및 영역별 가중치에 대한 객관성 확보 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란이 불가피하였다.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은 체제 내구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체제복원력, 체제적응력, 급변사태 가능성 등의 3가지 요인으로 분화하여 북한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방향의 새로운 현상들을 각기 새로운 개념으로 포착함으로써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체제적응력이라는 개념의 도입에서 예견되듯이 급변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귀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북한체제 안정성 평가에서 주의할 점은 어떻게 연구자의 주관성을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실태평가와 함께 시나리오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향후 5년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규명하고 시나리오별 예상 상황을 기술하였다. 북한체제 안정성 평가의 가장 큰 목적은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시나리오별로 미래상황을 예상해 봄으로써 현재 실행 중인 정책의 적실성을 검토하고, 원치 않는 시나리오를 방지하며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실태와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대북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이 대두된 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더욱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II 주요내용

북한체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정된 40개의 추동 요인들을 유사한 요인들로 묶은 결과 10개의 복합적 변수(Factor)를 도출하였다. 이들 10개의 복합적 변수들 중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미치는 주요 불확실성에 대하여 워크숍 참여자가 토의한 결과 김정일 정권의 안정, 북미관계, 개혁·개방, 식량사정 순으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 중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북·미관계에 북한체제의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로 결정되었다. 김정일정권의 안정성과 북·미관계의 두 주요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2×2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4개의 상황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김정일 정권이 안정되어 있고 북·미간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 진전되고 북핵문제가 비핵화 2단계를 넘어서 검증 및 폐기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관계 개선과 함께, 북·일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평화체제 논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논의가 진전될 것이다. 북·중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추진되고 북한의 부분적인 개혁·개방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도 진전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김정일 정권은 안정되어 있으나, 북·미관계가 갈등관계에 있는 상태이다. 북핵문제가 교착되면서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고립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것이며 2006년 북핵실험 이후 유엔에서 결의한 대북제가 적용됨으로써 북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미국은 인권과 PSI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비핵·개방·3000 구상은 가동될 수 없을 것이다. 남한내 대북정책과 대북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핵 문제 교착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이 불안정한 경우이다. 김정일 정권이 불안정하면 북·미 관계는 협력관계든 갈등관계든 체제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 내부의 핵과 핵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대량난민 사태, 내란, 기아 등과 같은 급변사태 대

비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북·미관계는 협력관계이나 김정일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경우이다. 미국은 북·미간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북한의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다. 미국 주도로 6자 또는 5자회담을 소집하여 북한 내부 안정화 방안은 논의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차기 북한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미국의 관심은 오직 북한 내부의 핵과 핵물질의 확산방지에 있다. 북·미관계가 갈등일 경우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여 완전히 굴복시킬 가능성도 있다.

### III 목차

####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
3. 북한체제의 의미

#### II. 경제 실태

1. 현시기 북한의 국민 경제 실태와 현황
2. 현시기 북한의 경제 운용 노선
3. 수령경제 운용과 시장경제 실태

#### III. 사회 실태

1. 생산노동의 주변화와 직업세계의 재편
2. 시장 확대의 사회적 영향
3. 계층 구조 변동과 빈부 격차 확대
4. 사회의식의 변화
5. 일탈현상 증가와 사회통제의 틈새 확대

#### IV. 정치 실태

1. 권력구조와 안정도
2. 통치방식과 국정운영

3. 김정일의 건강이상에 따른 통치행태의 변화
- V.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한 향후 5년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1. 개요 및 목적
  2. 참여자 발표
  3. 발표 내용 점검
  4. 추동 요인 추출
  5. 주요 불확실성
  6. 시나리오 구성
  7. 시나리오별 예상 상황
  8. 정책적 시사점
  9. 다음 단계
  10. 한계 및 보완
- VI. 결론
  1. 김정일 건강 악화와 오바마 행정부 출범
  2. 정책적 고려사항

####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지난 20년간 경제·사회적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여 온 북한의 앞길을 전망하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러나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 북한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김정일의 건강악화는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관리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이니셔티브를 행사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남한의 주도권 행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물질적 유인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고려되지 않았던 물밑접촉을 통해서라도 김정일의 건강악화 장기화와 사태 불안정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당국간 접촉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접촉,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접촉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상황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과 일본의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강화된 리더십 하에서 대북정책의 공조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건강악화에 따른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하여는 철저히 대비하되 표면적으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정일의 건강악화나 유고사태가 곧 바로 권력투쟁이나 노선변화,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칫 제2의 조문파동으로 발전하여 남북관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남남갈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김정일 건강악화로 인해 북한의 엘리트들이 충성심을 과시하고 대내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대남 강경태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 기조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통미봉남을 방지하는 한편 한·미공조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대북정책의 성패는 남한의 여론향방에 달려있기 때문에 남한여론의 향배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북·미관계의 급진전과 통미봉남 가능성은 낮으나 일시적인 북·미간 화해분위기나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에 남한내 여론이 동요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남한내 여론의 지지를 얻고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1년간 일종의 ‘무시전략’으로 남북관계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여론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간첩사건, 김정일의 건강악화 등으로 남북관계 소강상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였던 일반 국민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북관계 정체에 대한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다섯째, 남북관계의 주도권 행사 노력과 남북간 접촉 노력이 자칫 ‘냉탕 온탕식’ 정책으로 비치지 않도록 물질적 유인책의 질과 양을 적절히 조절하고 대북정책의 확고한 목표와 원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는 남한 내부에 국한된 이야기며 북한은 하나의 접촉점(통전부)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남북 교류를 통해 남북간 화해를 이루고 이질감을 해소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이제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라는 목표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정권·사회관계 변화와 대북 지원의 정책적 의미를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북·미관계 이외에 정권·사회관계의 변화가 고려될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 변화하고 있는 정권 대 사회 간의 의존과 갈등의 동태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경제난이 발생한 이후 북한에서 정권-사회 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다. 경제난으로 국가는 주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호' 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였고, 주민은 일상적 생존 문제와 관련하여 비정치적 분야에서 자율공간을 상당히 확보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보호'에 대한 의무는 방기한 채, '통제'를 재확립하려는 의도는 상실하지 않았다.

국가의 통제 의지는 2005년 10월 배급제 재도입 시도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책은 식량난 속에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2008년 식량 부족은 주민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층민'만의 식량난을 야기시켰다. 그 이유는 내부 시장관계 발전과 빈부격차 발생 때문이다. 시장관계의 확장과 함께 국가권력의 부정부패와 결탁하며 공생하는 준기업형 신흥부자 계층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의 일부는 식량사정의 악화에도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식량난 악화의 틈새에서 부를 축적하면서 과소비 추구를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하층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2005년 10월 이후 주요한 생계 유지 활동인 텃밭 경작 및 생계형 시장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대적 개입에 직면하고 있다.

정권-사회관계의 변화 속에서 북한 경제와 민생의 안정은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등 외부의 지원은 북한 내부의 위기의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외부 지원은 북한의 기형적 시장구조, 정권과 신흥부자의 결탁, 사회안전망의 부재, 주민 일상적 생계활동에 대해 적대적인 정부정책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 내부 생산성 향상과 하층민 생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인도적' 지원이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인도적'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지원이 북한 내부의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로 등장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 지원은 보다 전략적 고려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제관계연구부문

- ▶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 ▶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외 공저
- ▶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춘흠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유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지역군사연구실장)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이는 각국의 국내정치 차원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기초 및 대북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 I 필요성과 목적

21세기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정권 교체, 내각 교체, 2기 정부의 출범 등 국내정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국내정치 차원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기초 및 대북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아래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대외정책의 기초 및 대북전략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각 국가들의 개별상황에 따라 세부구성이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각 장별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일본을 살펴보면, 5년여간 집권하였던 고이즈미 정권이 막을 내린 후, 계승한 아베 정권, 후쿠다 정권이 1년 정도의 단명정권으로 끝났고, 아소 정권 역시 국민지지율의 하락으로 기로에 서있다. 따라서, 국내정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아베 정권의 국내정치, 후쿠다 정권의

등장과 국내정치 변화, 아소정권의 출범과 특징 등에 관해 정치과정론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한다. 아베 정권의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아베정권의 출범 배경 및 정권의 특징, 전후체제 탈피의 개혁정치, 7·29 참의원 선거의 참패와 아베 내각의 침몰 등에 관해 분석한다. 후쿠다 정권의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후쿠다 정권의 등장 배경 및 정권의 특징, 참의원 ‘여소야대’ 구도와 취약한 정국 운영, 후쿠다 총리의 조정형 리더십과 자민당 파벌의 영향력 증대, 내각개조와 후쿠다-아소체제의 등장, 후쿠다 총리의 리더십 한계 등에 관해 분석한다. 아소정권의 출범과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자민당 총재 경선과 아소 다로의 등장, 아소 내각의 출범과 특징, 국민들의 지지율 저하와 중의원 해산·총선거의 연기 등에 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내정치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외정책노선 및 대북전략에 관해 현실주의 시각에서 분석한다. 즉, 아베 정권의 대외정책노선 및 대북전략에 관해서는 고이즈미 정권의 대외정책 후유증을 극복하려는 동아시아 외교의 시도, 대외전략구상인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 미·일동맹의 확대와 미·일·호 3각 안보협력 강화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핵실험 후에 ‘압박’에 역점을 둔 대북전략과 북·일관계에 관해 분석한다.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전략에 관해서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외교 추진의 공명(共鳴),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강화, 한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분석하며, ‘대화 및 협상’ 중시의 대북전략과 북·일관계의 진전 등에 관해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 등장한 아소 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전략 및 북·일관계 등에 관해 분석한다. 아소 총리는 아베정권에서 외무장관 재임시 대외전략구상으로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을 제시한 바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중국의 국내정치에 관해서는 집단지도 체제, 관료 엘리트들의 영향력 확대와 분권화, 관료 엘리트들의 성향도, 군부의 국내결정 참여 상대적 축소 등에 관해 증점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중국의 대외정책노선에 관해서는 화평굴기와 화해세계 표방, 대국굴기 전략으로서의 전환 등을 분석하고, 동북아 전략에 관해서는 대미 견제 및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 대러 안보협력 확대,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등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나아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 즉, 북한의 안정도모,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관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지지 등에 관해 분석한 뒤, 대북전략과 중·북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대북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 제시와 중·북관계 복원 추진, 북

한 핵실험 이후 중·북관계 악화속의 진전, 미국의 북한 테러 지원 국가 해제와 중국의 입장 등에 관해 분석한다. 아울러, 중국의 대한국 정책과 한·중관계에 관해서는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협력관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러시아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러시아는 푸틴이 집권한 이후 면모를 새롭게 일신하였는데, 푸틴의 집권이 끝나고 새롭게 메드베데예프 정권이 등장하였다. 러시아의 국내정치 변화와 관련하여 푸틴정권의 국내정치에 관해 분석한 후, 메드베데예프 정권의 등장과 국내정치의 변화에 관해 분석한다. 즉, 푸틴정권의 중앙집권의 강화, 국가발전전략에서의 사회발전 및 극동발전전략 등에 관해 분석하고, 메드베데예프 정권에 대해 ‘정책변화 없는 정권 교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외정책노선에 관해서는 푸틴정권에서 메드베데예프 정권으로 교체됨과 관계없이 기초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아래 ‘실용주의 전방위 외교’, ‘다극체제로의 전환 주장’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 및 대북전략에 관해서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인식아래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 및 전략, 대북전략과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등에 관해 분석한다.

## II 주요내용

### 〈일본〉

#### 1. 국내정치의 변화

2006년 9월에 5년여 집권한 고이즈미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를 계승하여 아베정권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등장하였다. 아베정권은 ‘전후체제의 탈피’를 기치로 내걸고 개혁정치를 단행하였으나, 이념지향의 정치는 민심장악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2007년 중간 신임선거의 성격을 지닌 7·29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참패를 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아베총리는 갑작스럽게 사임하였다.

아베정권을 계승하여 후쿠다 정권이 2007년 9월에 출범하였다. 그러나, 후쿠다 정권은 자력에 의해 권력을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후쿠다 총리는 정국을 주도하는데 한계를 나타내었고, ‘참

의원 여소야대'의 취약한 권력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후쿠다 총리 역시 야권의 견제 속에 낮은 지지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1년에 전격적으로 사임하였다.

이어 아소정권이 2008년 9월 24일 출범하였다. 아소 정권의 출범에 대해 일본국민들의 평가는 아소총리에 대한 국민지지를 기반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출범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국민들의 지지율은 하락세로 나타났다. 국민지지율의 하락추세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금융위기로 확산되고, 그 후유증으로 엔고(円高)현상이 나타나면서 좀처럼 반전되지 못하였다.

아소총리의 실언, 참의원 여소야대의 구도와 오자와의 강력한 견제 노선, 자민당의 정책조정능력의 취약 등으로 인해 내각에 대한 국민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일본정국은 정권교체의 가능성 제고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2. 대외전략의 기초와 대북전략

일본의 대외정책기조는 미일동맹의 강화의 정책노선을 유지하면서, 고이즈미 정권의 후유증인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의 극복에 역점이 주어졌다.

아베 정권은 대중, 대한 외교 등 동아시아 외교의 전개를 시도하였고, 후쿠다 정권은 중·일관계의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후쿠다 정권의 외교적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시아 중시 외교는 아소 정권에게도 계승되었다. 그러므로, 향후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확대'라는 기본전략아래 아시아 중시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일본의 대북전략은 납치문제의 해결에 최역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정책은 국내정치화된 납치문제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고, 따라서 북·일관계 개선도 한계 속에 이루어졌다. 특히, 아베정권의 대북전략은 납치문제를 최우선시하는 결과, 북·일관계는 매우 경직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후쿠다 정권의 대북전략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납치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지만, 후쿠다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으로 인해 결실은 거두어 지지 못했다. 아소 정권 역시 중의원 해산·총선을 앞둔 선거대비 정권으로서 국민지지율이 저조하므로, 납치문제의 장벽을 극복하고 북·일관계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소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북·일관계는 냉각되었고,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중국〉

###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집중 분석하는 데 있다. 본문은 후진타오 정부 1기 출범(2003년 3월~2008년 2월)부터 후진타오 정부 2기인 현재까지를 정하여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 2.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2002년 말~현재)

중국정치는 후진타오의 개인 성향을 가미한 집단지도 체제가 지속되어 왔다. 2007년 10월 이후 후진타오를 정점으로 하여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역할분담을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였다. 이들 계파 사이에 갈등이 형성되면 중국이 또 다시 정치적 풍파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지만, 권력을 어떤 한 계파가 독점하지 않고 집단지도체제에 의해 중국의 정치체제가 작동할 것이므로 중국정치가 계파간 견제와 균형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특히 외교부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위상이 점차 강화된 반면,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와해되거나 이들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함에 따라 냉전시대에 크게 활약하였던 중공 黨대외연락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었다.

더군다나, 후진타오 1기 정부가 국가의 발전 목표를 조화로운 사회건설에 둠에 따라 정부부처 중에서 국내경제를 기안하고 추진하는 국가발전위원회와 국내경제관련 부처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대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해외무역 관련 부처들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관료 엘리트들의 역할과 정부부처 조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개혁개방 위주의 정부조직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반면에 인민생활을 중시하는 정책부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후진타오 정부 때부터 그동안 지속되어왔던 중국군의 국내정치에서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점이다.

### 3. 중국의 대외정책노선과 동북아 전략

중국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끼치는 중요한 요소들로 국가목표, 최고지도자의 위상, 경제발전 목표, 엘리트의 다양성외에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이 표방한 화평굴기 노선이 조화로운 세계 실현 기치보다 더욱 중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국이 국제경제와 더욱 깊은 연계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중국의 대외노선은 안보위주의 세력균형을 더욱 중시한 전략이었다면, 2005년부터는 대외노선에 경제안보를 가미한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그만큼 중국은 대외 노선책정에 있어 경제개념을 중시한 것이다. 중국의 동북아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정세 특히 동북아 및 한반도가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후진타오 정부 1기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대미 견제 및 전략적 협력 관계구축, 자국의 국방력 강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 4. 중국의 한반도 정책기조와 중국의 대북·대한국 정책

중국은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신장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 북한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지지하고 있다. 후진타오 2기 정부는 후진타오 1기 정부와는 달리 한·미 관계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한국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여 한·미동맹 강화를 억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자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과 안정을 지지하면 할수록 중·북 관계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정유지, 한반도비핵화 등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북한에 대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식량과 원유 등만을 지원함으로써 양국관계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는 경험 확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된 관계로, 구축하였다. 한·중 양국은 향후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분야 등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과 범세계적인 사안에 대해 외교 당국간 전략대화를 정례화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 〈러시아〉

2000년 엘친의 뒤를 이어 러시아의 대통령에 오른 푸틴은 2선을 마치고 자신이 지명한 후계자 메드베데예프에게 2008년 5월 권좌를 물려주었다. 임기 중 7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푸틴으로서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였으나, 새로운 정권에서 총리직을 맡음으로써 일단 성공적인 권력 승계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푸틴과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메드베데프 정권의 향후 진로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드베데프 정권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권력 투쟁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으나, 현재는 과연 메드베데프 정권이 얼마나 존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히려 러시아 정치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러시아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원유 및 천연자원 가격의 하락은 러시아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기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이 향후 도래할 수 있는 미증유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의 재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러시아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푸틴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금 권좌에 오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국민들의 70%는 푸틴의 3선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메드베데예프보다 푸틴을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푸틴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현행 4년인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과 하원의원의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1년 늘리는 연장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원과 하원 모두 통과되어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써 푸틴 총리가 크레믈린으로 복귀하기 위한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개헌은 조기 대선·총선을 위한 법적 구실을 만들어 주고, 이는 곧 푸틴 총리의 대통령직 복귀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최근 러시아는 더욱 공세적인 한반도 정책을 수행하면서, 한국과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북한에게는 과거의 우호관계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적극적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에서 러시아는 현재 중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미·러관계의 호전과 함

게 푸틴의 '실용주의 외교'가 화학적 반응을 보인다면 향후 6자회담에서는 북한 및 중국과의 정책 공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된다. 즉, 러시아는 현재의 3+3 형태의 6자회담에서 자신이 캐스팅 보드를 쥐는 4+2형태로 6자회담의 세력을 바꾸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일단 미·러관계가 현재와 같은 대립상황에서 차츰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6자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현재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KR-TSR 철도연결사업 및 한러 경협사업이 북한의 핵문제로 난항을 거듭한다면 러시아는 북한핵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푸틴정권과 메드베데예프 정권의 정치 변화와 대외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의 정책을 수용,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평가된다. 이는 향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Ⅲ 목차

- I. 서론
- II. 일본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1. 문제제기
  2. 국내정치의 변화와 특징
  3. 대외정책노선과 대한반도 정책
  4. 소결
- III. 중국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1. 문제제기
  2.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2002년 말~현재)
  3. 중국의 대외정책노선과 동북아 전략
  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와 중국의 대북·대한국 정책
  5. 소결: 한·중 전략적 협력 방향

#### IV. 러시아의 국내정치변화와 대북전략

1. 문제제기
2. 국내정치의 변화와 특징
3. 러시아의 대외정책노선과 동북아 정책
4.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노선과 대북전략
5. 소결

#### IV | 정책건의와 시사점

##### <일본>

일본의 국내정치를 보면, 고이즈미 정권의 5년여 개혁정치를 이어 등장한 아베 정권, 후쿠다 정권은 1년 정도의 단명정권으로 끝났고, 아소 정권 역시 해산·총선을 앞두고 국민지지율의 하락으로 기로에 서있다.

제1야당 민주당의 정권교체를 향한 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강하다. 아소 정권의 정치적 운명은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일본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소 연립정권의 내부가 '조기 총선 그룹 대 총선 연기 그룹'으로 나뉘져 있으므로, 일본 정국은 총선 결과에 따라 정계개편과 함께 정치적 지각변동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공명당 등과의 교류협력관계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정국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차기 총선에서 집권당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공명당은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선거결과에 따라 정계재편이 이루어질 경우,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초 및 대북전략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중시 외교, 납치문제해결의 중시 등을 지속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서 한일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중국〉

### 1. 정책건의

구체적인 정책건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한반도 특히 한국의 장래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점을 주지하여 한·중 관계를 “목표지향, 미래지향, 공평한, 강한 전략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협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과 경제전략대화를 확대 지속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중간의 문제점은 구동존이(求同存異) 방법으로 적절히 양국간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면서 현안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은 6자회담과 미·북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추구하고 북한과 단독으로 핵협상을 해서는 않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안전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무력적 해결방법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확대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는 판단에서 이를 지지하고 중국과 함께 대북 경협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국의 참여와 협력이 긴요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적극 담당하는 즉,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은 회피할 필요가 있다.

### 2. 시사점

중국은 북경올림픽 대회 개최이후부터 더욱 자신 있게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게는 “기회 6, 위협 4” 혹은 “기회 7, 위협 3”으로 평가되어 기회가 많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확대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정부는 대중 관계 증진을 한·미·일 삼각 전략구도에서 판단해서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중국군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역시 중국과 대만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상호 신뢰 구축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 〈러시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는 신외교개념 및 신군사독트린 등 국가 공식문건에서 남북한 균형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지역에서 비핵화, 군사 대결구도를 탈피한 평화와 안정유지, 남북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러시아가 참가하는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간의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확립, 그리고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 등을 對한반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 증진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유인하고자 하며, 북·러 양자간 협력보다는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의 경제협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이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순조로운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러시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러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핵에 대한 한러간의 공통 인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의 핵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도 주변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에 장애 요인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북한 핵이 가지는 근본적인 위협보다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을 경우 북한의 조기 붕괴를 더욱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안정 위협요소에 대해 먼저 공통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러간 보다 실질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또한 '09년 한러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곰 3차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곰사업'은 우리가 러시아에게 거의 유일하게 leverage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순기능에서 역기능으로 역할이 전도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의 목표가 명확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즉, 불곰사업의 목표가 ①한·러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목적, ②전력 증강계획, ③경협자금 환수 등으로 분산되면서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나타났으며, '불곰사업'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 면밀히 검토된 사업이 아니라 당시의 즉흥적인 정치적 결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 파장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불곰사업의 목표를 되도록 간결하게 정리하는 가운데 확실한 목적의식을 갖고 진행하고, 정량화 되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구기보 (송실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강국으로 현실화하면서 점차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한중 FTA 체결이 갖는 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한중 및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 I 필요성과 목적

범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에 부응해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FTA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해외시장 확보, 외국인 투자유치, 능동적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국가 전반 시스템의 선진화와 국내 생산성 및 국민후생 증대를 이루는데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특히, 미국, 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추진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으로까지 평가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미국·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FTA 전략도 경제통상 차원만이 아닌 포괄적 수준의 대외전략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북핵문제의 해결 및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의 협력적 구조를 창출하고, 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FTA가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대경제권 중의 하나인 중국과의 FTA 추진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적 부상에 힘입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은 인접국이자,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의 경제발전 뿐 만 아니라 대외전략에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한·미 FTA 협상이 공식화된 작년부턴 한·중 FTA 체결에 적극적 행보를 보여 왔다.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에 대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미·일과 협력하는 한편, 미·일 등 해양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도 강화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강화를 상쇄하려는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FTA 체결과정과도 밀접히 연동되어 있다. 또한 FTA의 지역주의(Regionalism) 속성을 고려한다면, 한·중 FTA는 한·중 양자 간의 협력관계를 포함해 남북경협 및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민족문제와 국제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중 FTA는 한·중, 북·중, 남북관계 등 3자 3변 관계의 변화에 주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 및 평가는 선결되어야 하는 작업이지만,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의 외교안보적 지형을 감안한다면, 한·중 FTA의 정치·외교적 영향에 관한 분석은 한·중 FTA를 균형적으로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중 FTA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강국으로 현실화하면서 점차 우리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국과의 FTA 체결이 갖는 경제 및 정치·외교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주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와 남북관계의 상관성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한·중 FTA의 정치 및 외교안보적 측면에 대한 연구, 특히 경제 및 정치·외교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한·중 FTA의 추진전략 더 나아가 한국의 FTA 추진전략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 II 주요내용

본 연구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외교안보적 효과를 평가하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찾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경제적 접근과 정치·외교적 접근을 포함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위해 정치학자와 경제학자의 공동연구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분석과 함께 정태적인 문헌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병행했다. 아울러 연구의 질적 수준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국내 전문가의 견해를 수렴해 연구에 반영하였다.

우선 2장에서 지역주의 속성을 갖는 FTA의 개념 및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국제정치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한·중 FTA의 외교안보적 효과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논점들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사례를 통해 중국이 FTA를 추진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분석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부국들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 및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주도권 확립 등의 주요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는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한·중 FTA를 한·중 양자간 무역확대를 위한 경제협정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발전과 관련한 대외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영향을 평가하였다.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경제발전의 기회로 삼는 한편,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에서 자국 영향력의 유지 및 확대를 시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발언권을 바탕으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를 통해 볼 때, 한·중 FTA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대중 경제의

존도를 심화시켜 한·중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한·중 FTA는 동북아지역의 FTA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협력에 제한적이거나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5장에서는 한·중 FTA가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의 3자 3변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한·중 FTA는 경제적/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과 함께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중 FTA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북한의 개혁개방 등 변화 촉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나, 중국의 영향력 증대로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 III 목차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구성
- II. FTA에 관한 국제정치적 논의와 적용
  1. FTA의 개념 및 내용
  2. 국제정치적 논의와 적용
- III.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사례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및 사례
  3. 전략적 의도 분석
- IV.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영향
  1. 추진경과
  2. 추진의도
  3. 영향평가

- V.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대응방향
  - 1. 한·중 FTA와 남·북·중 관계의 함수
  - 2. 남북관계를 고려한 대응방향
- VI. 결론 및 과제

####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남북관계를 고려한 우리의 한중 FTA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한·중 FTA는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나, 우리의 대외 주도력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 FTA는 대중국 수입이 대북한 수입을 대체하고 대중국 투자증대가 대북 투자를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남북한 교역 및 경험의 비중이 한·중의 그것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대비도 필요하다. 반면에 한·중 FTA는 남북 물류 및 교통체계 연결의 기회가 되며, 남·북·중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를 남북한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이익을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중 FTA는 한·중 간의 협력 및 상호의존을 증대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즉 남북한의 긴장완화 및 안정적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더 나아가 향후 통일과정에서 우리와 중국의 상호 협력 기회를 높이고 대북정책에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비대칭적 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될 경우 중국의 주도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안보외부효과는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협력에서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나, 전통적 한·미관계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한·중 FTA의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치

들이 연계·균형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이익 집단의 분열 및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바, 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것이 대북지원 및 경협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향후 한·중 FTA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외전략 수단으로서의 포괄적 추진이다. 즉,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을 고려해 한·중 FTA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계균형접근이다. 경제 및 외교안보 이익의 연계 및 균형을 위해 한·중 FTA의 체결을 기존의 한·미 FTA와 논의 중인 한·일 FTA와 전략적으로 연계해 동북아 FTA의 허브로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선순환유도이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한·중 FTA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한·중 FTA로 증대된 한·중협력관계의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중협력과 남북협력, 동북아협력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한·중 FTA가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한·중 FTA의 파급효과를 고려 국내 정치·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 FTA를 우리의 국가전략과 한반도의 국운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행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의 강화를 통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이다. 한·중 FTA는 한·중관계의 발전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국내 및 한반도 주변정세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한 한·미간의 의견교환 및 정책조율을 강화하여, 한·중 FTA로 인한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한 한·중 FTA로 인한 한·중관계의 발전을 북한 핵의 폐기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는데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및 주변 4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한·중 FTA는 남·북·중 3자 협력에 기회가 되겠지만 이와 별도로 북한

의 대남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에너지·경제지원과 같은 상응조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인바, 에너지·경제지원 실무그룹의 의장국인 우리는 북핵문제의 해결 및 이행과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및 지역 경제협력체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의 변화 또는 정상국가화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국제관계연구실장), 홍우택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호 (국방대학교 교수),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외교 정책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공유점을 넓히면서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주변국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I 필요성과 목적

한반도에서의 통일문제는 무수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난제인 동시에 풀어야만 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남한 정부는 북한의 개방·개혁체제로의 변화, 남북관계의 발전, 평화정착 등이 어우러진 통일의 달성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상적인 통일 한국은 한반도 전체를 “풍요롭고, 강하고, 민주적이며 통일된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이다.

통일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한반도 주변4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우리의 정책에 대한 굳건한 지지와 협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서독의 외교가 유럽의 평화와 안보의 틀 속에서 추진된다는 국제적인 신뢰를 얻은 것이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강건한 지원과 협력은 영국의 대처 수상,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그리고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를 독일 통일의 지지자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독일의 통일이 주변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와 발전에 공헌한다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남북관계는 민족문제이자 한반도 현상 변경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이 영향을 미치는 국제문제의 성격을 갖는다.

이명박 정부는 대외적 국정지표로서 '성숙한 세계국가'를 설정하고, 특히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파트너십과 경제 안보문화공동체 구축' 등의 과제로 내세웠다.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장차 통일에 우호적인 외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정부가 맞추어야 할 초점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주변국들의 역할을 고취시키고 협력을 얻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변화에 기초,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통일 외교의 인프라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II 주요내용

상기의 목적 아래 먼저 II장에서는 통일 외교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한국의 통일 외교의 결과는 한국의 정책을 수용·지지하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현실주의가 제시하는 정책방향은 국력 면에서나 북한에 대한 협상카드 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방향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찾는 것이다.

III장에서는 냉전시대에서부터 탈냉전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통일 외교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루고 특징을 분류하였다. 특징으로는 첫째, 대북 대결 및 경쟁을 전제로 한 제압과 우위확보 노선에서 공존을 전제로 한 평화와 공영의 노선으로 변화했다. 둘째는 추진방식의 변화로, 주로 양자적 접근방식에서 점차 다자적 외교 노력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셋째, 분야의 변화로, 냉전기에는 주로 국가정통성에서의 우위확보와 안보강화라는 정치·군사 분야에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었으나, 탈냉전기에는 그 외에도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권, 인도적 지원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증대되었다. 넷째, 외교의 행위주체 다양화로, 과거에는 정부가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나, 통일을 위한 외교활동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국내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정부 외에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커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제 및 국내 여건의 변화와 국내 역량의 강화로부터 기인한다.

IV장에서는 탈냉전시대의 평화 및 통일 외교의 성과와 한계를, 북핵 문제,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문제, 그리고 북한의 변화 조성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한계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태우 정부 시기는 평화의 조건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좁혀질 수 없는 시각차로 인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 김영삼 정부 시기는 북한의 대미 우선 접근에 따라 남북 간의 직접 협상과 해결 시도는 북한의 거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는 북한 핵문제를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의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겠다는 6.15공동성언의 취지도 빛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대북 '포용' 정책도 한계를 보였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핵 불용의 원칙은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으며, 북한의 핵 실험에서 보듯이 외교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 협력이 평화와 통일 외교의 핵심이었으나 한·미 정책공조는 때때로 불협화음을 낳았으며 갈등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V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통일 외교 추진체계를 다루었다. 새로운 평화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이행하는데 있어 포괄적, 호혜적, 단계적, 동시병행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포괄성의 원칙은 평화구조 당사국과 관련국의 우려와 관심사항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루는 것을 말한다. 둘째,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일방의 요구를 타방에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이익이 되는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평화구조 창출은 긴급하고 타결 가능한 사안부터 합의·이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화구조 창출은 북핵문제 해결,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 등을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병행추진 해야 한다.

그리고 VI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 외교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기본 방향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첫째, 통일전략(unification strategy)을 국가발전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통일청사진(Blueprint for Korean Unification)을 구상하여 제시한다. 둘째,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 틀' 속에서의 한국의 통일 추진이라는 정책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논리와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이해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외교력을 구축한다. 셋째,

대북 및 통일 정책의 전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이미지 제고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전략과 접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따른 통일의 철학과 목표가 바뀔 수는 없다. 평화통일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넷째, 평화통일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대내외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형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III 목차

- I. 서론
- II. 통일 외교의 이론적 고찰
  1. 국제정치이론의 조건부일반화(Conditional Generalization) 필요성
  2. 국가의 성향: 현상유지(Status quo) vs. 현상타파(Revisionist)
  3. 북한의 국가성향: 현상유지국가? 아니면 현상타파국가?
  4. 국가성향 변수를 통한 국제정치이론의 비판적 고찰
  5. 소결: 전략적 개념으로서의 통일 외교
- III. 통일 외교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징
  1. 기본노선 및 전략
  2. 추진 형태/방식
  3. 주요 분야
  4. 행위 주체
  5. 소결
- IV. 평화 및 통일 외교의 성과와 평가
  1. 북핵 문제
  2.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문제
  3. 북한의 변화 조성문제
- V. 신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통일 외교 추진체계
  1. 이명박 행정부의 '신 평화구조 창출' 방안

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6자회담
  3. 신 평화구조를 위한 외교 추진체계와 전략
- VI. 통일 외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
1. 기본 방향
  2. 인프라 구축 방안
- VII. 결론

####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통일 외교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변화를 양자 간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고 북한의 변화를 고무시키도록 주변국과 협력하는 외교를 말한다. 통일 외교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세부 방안을 정책 건의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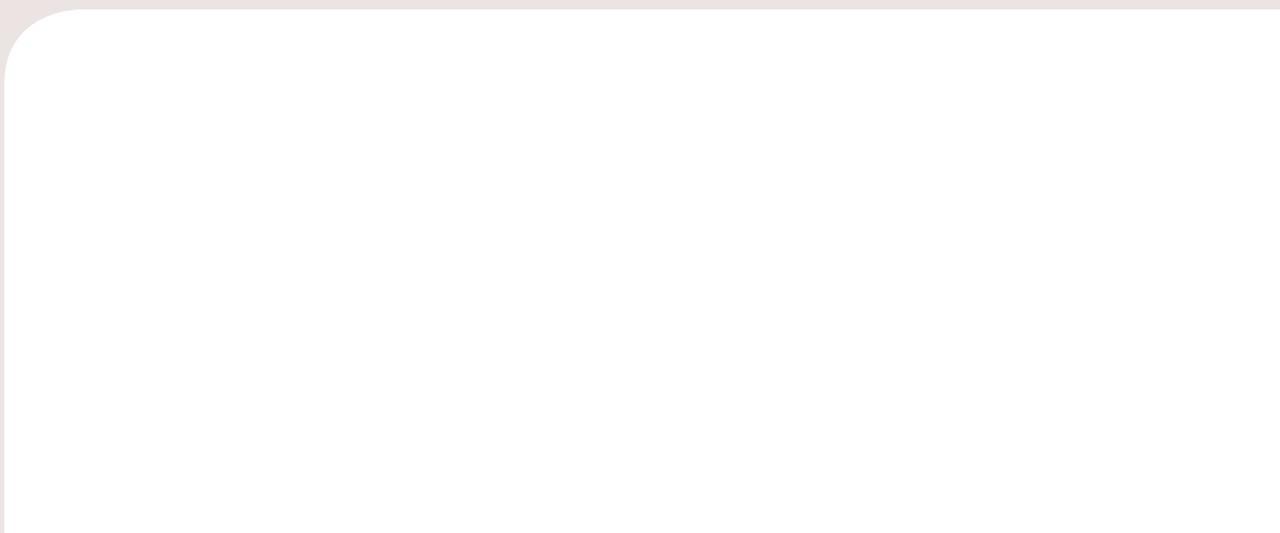
무형적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1) 통일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립, (2) 한반도 통일의 지역 평화·안보 및 공동번영 기여 논리 개발, (3)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 지원의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유형적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서는 우선 대내적 차원에서는 (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 제고 방안 확충, (2) 통일전문요원의 양성 및 해외파견 확대, (3) 통일외교 활동 논의의 장 마련, (4) 북한 포함 다자경험 전담기구 신설, (5) 통일외교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대외적 차원에서는 (1) 정책협력 네트워크의 체계적 구축, (2) 주변 4국 한반도문제 관련 인사에 대한 체계적 정보관리, (3) 주변 4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법의 개발, (4) 통일 외교 관련 국제공동기금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은 결국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외교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폭력적 '강제'가 아닌 설득과 평화적 방식으로의 우호적 설복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은 통일의 추진과정에 세계 질서를 끌어가는 주요 강대국이 모두 관여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현상 변경에 참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손을 잡는 방식이 중요하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 틀' 구축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 양자적, 다자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통일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4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운 협력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은 각각의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양자적, 다자적 차원의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역내의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가교(架橋)국가로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양자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각각의 나라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미·일, 한·중·일 등 다양한 3자 관계를 중첩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북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평화 통일의 추진을 위해서 한·미동맹 발전 기반의 내실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주도적 역할 강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의 역할 신장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현상 변경이 주변국의 이해관계의 신장에 도움이 되며 지역의 새로운 평화 및 번영의 질서 구축에 기여한다는 신뢰의 외교로 이해되어야 한다.



# 북한인권연구부문

-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외 공저
- ▶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국제사회가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 필요성과 목적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비정부인권단체가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악화된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공론화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북한인권문제가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의 이념적 지향으로 인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자유권 중심으로 공개적 압박전략을 중시하는 보수 진영과 생존권 중심으로 대북지원을 중시하는 진보진영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다. 보수진영이 북한인권 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남북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국제사회는 특정국가와 지역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에 입각하여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남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해결한다는 한국정부의 대북인권정책과 갈등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받으면서 공론화

되어 왔고, 이념적 지향으로 인해 효율적인 논의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북한인권 논의는 주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인권침해 현실이 초래된 구조적 요인에 집중되어 왔다. 특히 보수진영의 북한인권운동은 국제사회와 연대 하에 인권실상을 폭로하는 공론화 위주로 전개되어 왔다. 즉 공론화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공개적 개선촉구 및 비난(Naming and Shaming)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진보 진영은 이러한 보수진영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개선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치중하여 왔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문제,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를 포괄하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을 핵심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거론하는 등 개선의지를 표명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지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먼저 2008년 3월 제7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문에서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3월 27일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비탄 문타본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을 때 찬성표를 던졌다. 2008년 공동발의국으로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개별국가, NGO 등 각 행위주체별로 다양한 개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유엔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관 임명 등 특별절차를 활용하여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한과 인권분야 대화 및 기술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일부 NGO들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도 4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 유럽연합 및 회원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 북한은 수교를 통하여 고립을 탈피하려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북한이 유럽연합에서 제기한 인권대화를 수

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채택함으로써 법률에 입각하여 북한인권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제정은 국내차원의 북한인권문제 공론화의 기제가 되었다.

이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는 공론화를 넘어 북한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개발하는 단계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는 국제사회가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고 추진해 온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전략, 특히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주요내용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행위주체별로 구분하여 압력과 대화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위주체는 크게 양자 차원과 다자 차원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유엔회원국이고 4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유엔의 개선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도 다자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유엔인권레짐을 별도의 행위주체로 설정하고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엔인권레짐은 크게 현장에 기반하여 설립된 시스템과 국제인권협약에 기반하여 설립된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특히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이후 보편적 정례검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바, 인권이사회를 위한 제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들도 직접 개입, 제재, 입법, 대화와 기술협력 등 다양한 개선전략들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행위주체를 근간으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압박과 대화 전략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자간 개선전략에 대해서는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으로 인권의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실행프로그램들이 논의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문제를 포함하여 다국적 기업이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권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각 행위주체의 전략과 더불어 구체적 사례와 프로그램들을 예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I 목차

- I. 서론
- II.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레짐
  - 1. 현장에 기반한(Charter-based bodies) 인권레짐
  - 2. 규약위원회(treaty-based bodies)
  -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분야 기술협력
  - 4. 평가
- III. 다자간 협상과 국제기구 개입 전략
  - 1. 헬싱키 프로세스와 다자간 협상 전략
  - 2.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 3. 평화에 대한 위협과 유엔 안보리 개입
  - 4. 평가
- IV. 양자 간 인권개입 전략과 사례
  - 1. 양자 간 제재 전략
  - 2. 양자 인권대화
- V.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전략
  - 1. 유엔인권레짐
  - 2. 유럽연합
  - 3. 미국
  - 4. 일본
  - 5. 우리의 북한인권 개선전략
- VI. 결론

###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첫째, 국제사회의 개선전략을 고려할 때 우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년 9월로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검토에 대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편적 정례검

토를 위해 북한이 제출하는 국가보고서 이외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특별절차 등의 보고서, 규약위원회의 최종검토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엔의 특별절차, 규약위원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해당사자가 제출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므로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고서 심의 과정, 최종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개별국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발언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보고서가 채택되면 북한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권비정부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규약위원회에 대한 북한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장에 기반한 인권기구와 달리 규약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국가보고서 심의과정에서 규약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도록 한다. 또한 4개 국제인권협약 보고서 심의 결과 규약위원회가 작성하는 최종검토의견서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약위원회 전문위원들의 방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유엔의 특별절차에 협조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이면서 4대 국제인권협약의 가입 당사자인 북한이 유엔의 인권개선 요구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거부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개방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고립을 탈피하고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정치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인권분야에 대해 유엔과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인권결의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남북대화를 통해 비공개로 설득해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 인권분야 기술협력이 기회의 창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인권분야 기술협력은 북한이 우려하는 부정적 국내정치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기술협력에 협조할 경우 북한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 재개, 북미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미간 인권대화가 성사되도록 하는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양자 인권대화의 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8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 정상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핵 검증과 폐기 단계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면 북한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미 양자 간 인권대화의 개최를 요구하도록 한미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이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을 주도함으로써 중단된 유럽연합과 북한과의 인권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와 양자 인권대화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와도 협력하여 북한과 양자 인권대화에 나서도록 협조하고 북한을 설득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자 인권대화에서는 인권인식과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등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동시에 다른 양자대화에서 보듯이 북한 내 지역 방문과 지방관리와의 대화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등 북한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관련 연설과 질의·응답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양자 대화 과정에서 북한 국내법률의 개정, 특별절차 보고관, 규약위원회 위원 등의 방북에 대해 북한이 협조하도록 촉구해나가야 한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여건을 조성해나가되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해나감으로써 규범 친화적 개방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불가능한 현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인권의제를 체제위협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고립 탈피, 경제협력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 활용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인권대화의 여건을 조성해나가고 인권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대화를 통해 인권분야 기술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북한 스스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적 여건을 조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법치라는 관점에서 남북 간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인권분야 기술협력의 핵심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권 개선 과정에서 규범 친화적 개방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치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협력을 통해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법 집행과정에서 주요한 인권원칙들을 숙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법치지원 과정에서 특정국가의 법률 정비 및 사법부 인력의 교육 등의 방식을 넘어 주민들의 권리의식, 법의식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따라서 법치지원 과정에서 법률 정비 및 사법부 인력 교육을 1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하는 전략들을 개발해나가야 한다.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개념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남북 민간교류과정에서 부문별 인권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인식을 제고해나가도록 한다.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보듯이 인적 접촉과 정보교류를 통해 인권인식이 향상되고 규범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에 영향을 미친 것은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지도원칙 중 제7원칙인 ‘사상, 양심,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 그리고 바스켓 III 「인도적 차원 및 기타 분야 협력」이다. 제7원칙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인권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인용하여 왔다. 그렇지만 실제로 개방과 인권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스켓 III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개발과정에서 인권개선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1990년대 들어 유엔기구들은 모든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인권개념을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인권과 개발(development)은 상호강화(mutually reinforcing)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국제기구들이 인권 개선을 위해 중요시하는 가치는 참여 및 비차별(inclusion and non-discrimination), 국가 및 지역단위 소유권(national and local ownership), 책임성과 투명성(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참여 및 역량강화(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등이다. 인권적 차원에서는 북한주민의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중요시 하고, 특정 계층의 식량권의 저해를 방지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민들이 스스로 식량을 구입할 수 있기 위한 역량, 취업, 토지, 신용, 상속

혹은 교육정책 등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식량 독과점으로 인한 식량접근권의 문제, 지역 및 다국적 기업의 관행 및 폐해로 인한 식량접근권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북개발기구들은 인권이라는 용어를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더라도 개발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세력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개발기구들은 인권기구들처럼 단순히 ‘비난과 압력(naming and shaming)’의 접근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지역조직을 통한 북한 내 가치 변화, 법률, 정책 및 조직 변화 추구, 차별에 대한 저항 등의 방식을 추구하여야 한다.

#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최진욱 (북한연구실장)

이 백서의 발간목적은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북한인권의 중·장기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

## I 필요성과 목적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2007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 당국은 유엔총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면서도, 아동권 규약 관련 제3차·제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긍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졌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06년에 이어 2007년도에도 북한은 심각한 수해를 경험하였다. 국제사회는 2007년에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나 것으로 평가하였다. 통일연구원은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편 북한 인권의 중장기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국·영문으로 발간하고 있다.

## II 주요내용

###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역압적인 북한체제와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으로 유린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사회일탈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의 사회 통제 강화로 인하여 북한주민들의 자유권, 생명권의 유린이 일상화되고 있다. 빈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은 공포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전히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다.

### 2.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2007년도에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생명권이 존중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새터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급노선이 견지되고 관련자들의 인권 인식이 미약하여 정당한 범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을 자행하는 등 여전히 비인간적인 처우가 만연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을 구분하여 입당, 교육, 제반 생활에서 차별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연좌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신분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유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에 따른 비공식 차원에서의 시장요소의 활성화 등 의도하지 않은 사회변화의 결과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교육기회, 직업 등에서 성분정책이 완화되고 있으나 당 기관 등 체제보위를 위한 직책에 등용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출신성분이 핵심적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한다.

여행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행증 제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여행을 통제하고 평양, 국경지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도 통제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여행증 제도가 공식적으로 견지되고 있지만 경제난은 실제 여행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할 경우 보안원들의 단속으로 여행증이 필요하지만 기차 이외의 이동수단으로 도 내에서 육로로 이동할 경우 여행증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퇴색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언론·출판, 결사·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약은 본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최근 핸드폰 등 외부정보 유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밀리에 비디오를 시청하는 행위는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장마당 등에서 매대를 통해 비밀리에 외국서적들이 유통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인가된 종교시설과 종교의식, 중앙 종교단체 이외에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등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경우 종교인과의 접촉이 발각될 경우 경제적 동기에 의한 탈북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최근 북한의 농업생산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곡물 소요량을 약 630만 톤으로 계상하면 아직도 2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주민의 식량접근권은 단순한 북한의 식량수급실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시장에서의 식량가격의 변동 폭과 주민들의 식량구매능력 간의 차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식량가격이 보다 하향 안정화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식량구매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면 주민들의 식량접근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7·1조치로 인해 사실상 포기한 의·식·주 공급제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 명시한 각종 복지급여의 모순과 마찰은 과거와 달리 가입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가사회복지제도가 지향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7·1조치로 인해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고 국가에 납입해야 할 집세, 전기세, 교육세, 교통비 등의 세금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제 구매능력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 4. 소수자 인권 실태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북한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마당 보안원, 열차승무 보안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특히 북한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및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기근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숙아 내지 저 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신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도 붕괴됨으로써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으며 굶주림과 가정해체로 인해 많은 ‘꽃제비’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다.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 악화는 이들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5.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남북적십자 간 이산가족 상봉행사(2~16차)를 통해 국군포로 101명의 생사확인 의뢰가 이루어져, 13명 생존확인, 12명 사망확인, 76명 확인불가, 11명 상봉이 성사되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관련 20가족(78명)이 상봉에 참여하였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의 규모는 한국전쟁 중 실종된 것으로 신고된 행방불명자가 4만 1,971명이며, 이중 포로교환시 귀환자 8,726명, 유가족 신고와 관련 자료에 의하여 전사 처리된 자 1만 3,836명, 이들을 제외한 1만 9,409명으로 추정된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 4월 기준 귀환 국군포로 본인 73명, 동반 가족이 157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완화되면서 새로운 탈북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탈북자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탈북주민의 규모가 3~10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인 양첵밍도 중국 내 탈북자 규모가 3만 명 선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중국 군사과학원 왕이성은 탈북자는 5만 명 이하이며, 그 중 많은 수가 수차례 월경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만에서 4만 명 선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탈북자의 인신매매 실태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도강 안내인들이 인신매매에 관여하는 경우이다. 북한 전 지역에서 식량난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북한주민의 불법 국경이동과 관련 알선행위가 실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지, 단순 밀입국 알선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다. 일부사례에서는 탈북경험이 있는 이웃주민이나 도강안내인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웃이나 친척과 동행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어 왔다. 강제결혼의 형태로 소개된 경우에도 중국남성과의 동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성적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북한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이후 상대남성을 찾지 않게 된다. 중국남성과 장기간 동거하게 되는 경우 임신하게 되면, 유산 혹은 출산을 상대남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중국남성과 동거과정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제결혼을 지속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Ⅲ 목차

- I.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
  1. 북한체제의 특성과 인권
  2. 북한의 인권개념
  3. 국제인권레짐과 북한 인권

## II.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

1. 생명권
2. 신체의 자유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4. 평등권
5. 자유권
6. 종교의 자유
7. 참정권

##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실태

1. 식량권
2. 사회보장권
3. 근로권
4. 직업선택의 자유

## IV. 소수자 인권 실태

1. 여성권
2. 아동권

## V.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1. 납북억류자 실태
2. 국군포로의 인권침해 실태
3.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북한인권백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단행본 북한인권 보고서로서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사회의 인권실태를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영문으로 번역되어 인권관련 국제 NGO,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각국 주한 대사관, 인권운동 전문가들에 배포되어 매년 시행되는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기능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은 법률을 개정하고 탈북자에 대한 처

별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실태의 변화에 대한 지속 여부를 평가하여 대북인권 개선 전략을 수립 할 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안별로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과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측면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요구전략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보고서의 발간이 필요하다.

# 협동연구부문

-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김국신 외 공저
- ▶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박형중 외 공저
- ▶ 동북아 4국에 대한 실용외교와 북핵문제  
김국신 외 공저

거버넌스 협동연구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김국신, 박종철, 허문영, 최진욱, 임순희, 강동완 (이상 통일연구원),  
장의관 (통일교육원),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이준호 (안양대),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

## I 필요성과 목적

통일정책 분야가 중앙정부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단체들 및 초국가적 조직들과의 연계망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유된 논의의 장으로 전이할 필요가 있다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노력들은 최근 들어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학계 및 행정 부서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통일정책 분야 내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거버넌스적 시각을 적용한 연구사례들의 수적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수의 연구가 시민사회 및 기업의 영향력이 점증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확인하는 서술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거버넌스 이론의 체계적 적용과 이로부터 수반되는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만큼의 분석적 심도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체계화된 연구에 대한 요청은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들 간의 효율적 분권구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치 네트워크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적 토양에서 적절한 정책결정 거버넌스의 방식이 무엇이며, 현재 거버넌스가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수준과 양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서 통일정책 거버넌스의 예외적 특징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거버넌스 형태가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지 등에 관한 이슈들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통일정책 연

구 분야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통일연구원은 여타 연구기관들과의 공조 하에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분야별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3년간의 협동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번 3차년도 연구는 지난 1·2년차 연구를 종합적으로 마무리 하는 한편, 남북한 거버넌스의 공고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목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실태조사(1차년도)와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2차년도)에 이어 금번 3차년도 연구에서는 각 분야별 이슈의 거버넌스 유형 및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거버넌스 모델 적용에 대한 적실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같은 남한 내부 행위자들의 거버넌스가 북한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조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연계되고, 나아가 남북연합 거버넌스로 확장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금번 3차년도의 종합적인 연구계획이다.

2008년의 연구사업 주제는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으로서, 지난 2년에 걸친 선행연구를 토대로 남북관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거버넌스 분석의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지난 선행년도 연구에서 중요성이 간과된 2개의 정책 분야들에 대한 보완적 연구들을 진행한다.

## II | 주요내용

먼저 통일정책 분야의 새로운 거버넌스 분석 모형을 제시하고자 시도하는 첫 번째 연구는 통일정책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거버넌스의 패턴들을 비교 분석하고 이들 패턴들을 제시된 4개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즉, 선행년도에서 다루어진 이슈 영역들 중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남북경협 거버넌스, 사회문화 남북교류 거버넌스,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등의 5개 분야에 대해 거버넌스의 패턴 분석을 시도하고 거버넌스 유형들을 체계화한다.

두 번째 연구는 북한을 단일 행위자로 가정하는 기존의 거버넌스 연구들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 내부 행위자들의 위상과 역할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미래지향적 거버넌스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한마디로 거버넌스를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를 논하는 것이 성급하다면 최소한 그 전

단계로서 행위자들이 증대되고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내부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증대되는 점에 주목하여 거버넌스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이러한 행위자들의 자율성, 네트워크, 효율성 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세 번째 연구는 남북통일의 과도적 정부형태라고 할 수 있는 남북연합의 형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기존의 법적, 제도적 시각과는 차별화를 꾀하는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진행한다. 기존의 남북연합 관련 연구는 남북연합의 제도적 틀과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다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을 하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행위자들과 협력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남북연합의 형성을 위한 환경적 조건과 남북연합의 운영에 대한 실질적 메커니즘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국가가 시민사회와의 협치적 정책결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시민사회의 부족한 자원과 역량 등을 보완하고 상호이해의 상충 등에 중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메타 거버넌스의 시각을 적용한다.

### Ⅲ 목차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 개발 및 발전방안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3. 선행년도 연구의 내용
4. 2008년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과정

##### 제2장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 I. 서론: 연구의 목적
- II. 이론적 배경

- III. 이슈영역별 거버넌스 분석
    - 1. 네트워크의 복잡성
    - 2. 네트워크의 자율성
  - IV.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
    - 1.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 2. 모형의 적용
  - V.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형과 발전방향
    - 1.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형
    - 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의 발전방향
  - VI. 요약 및 결론
- 제3장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 I. 서론
  - II. 통일정책의 재인식과 거버넌스모델 적용의 유용성
    - 1. 통일정책의 재인식
    - 2. 통일개념의 확대와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 3.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
  - III. 북한의 당·국가체제와 최근변화 실태
    -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사회조직
    - 2. 최근 변화실태
  - IV.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거버넌스: 정책 및 행위자
  - V. 남북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계방안
    - 1. 대북·통일정책 거버넌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 2. 대북·통일정책 거버넌스 발전방안
  - VI. 결 론
- 제4장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 I. 서론
  - II. 남북연합 형성의 거버넌스
    - 1. 정치적 신뢰구축과 국민적 합의
    - 2. 평화체제 구축

3. 북한의 개혁개방

4. 북한 사회의 제한적 다원화

### Ⅲ. 남북연합 운영의 거버넌스

1. 정치기구의 형성 및 운영

2. 군비통제

3. 경제통합

4. 사회문화통합

### Ⅳ. 결 론

#### 제5장 결 론

1. 추진연구의 내용

2. 종합평가

## Ⅳ | 정책건의와 시사점

2008년의 연구사업은 먼저 통일정책 분야의 거버넌스 양태들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모형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지난 2년의 선행연구들은 통일정책 분야의 거버넌스의 현재적 실태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한 개선책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물을 토대로 통일정책 분야의 거버넌스의 다양한 양태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거버넌스의 분석에 유용한 실용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향후 남북한 거버넌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는 최종적으로 북한 내 거버넌스의 확장 방안으로 남북 주민 간 접촉면을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처방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대북관련 국제협력의 네트워크 및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남북연합형 성기와 남북연합운영기로 시차적인 분리를 시도한 후 각 기간에 맞는 거버넌스적 정책 제안을 시도한다. 남북연합형성기는 정치, 경제, 안보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하며, 구체적 과제로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신뢰구축, 국민적 합의형성,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시장경제화, 북한사회의 다원화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남북연합운영기는 남북연합이 형성된 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기간으로 특성 지워지며, 남북연합의 유지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작동시키고, 군비통제를 이룩하며,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사회문화통합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유했다.

개발지원 협동연구

#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박형중, 이금순, 김수암, 조한범, 임강택, 김규륜, 박영호, 전병곤, 최춘흠, 김영윤,  
최수영, 강동완 (이상 통일연구원), 권영경 (통일교육원), Lynn Lee (Intermedia), 이조원 (중앙대),  
권율, 정지선, 박수경 (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형수 (한양대), 송정호 (우석대), 임을출 (경남대),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 최철영 (대구대), 박정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I 필요성과 목적

‘인도지원’이 10년을 넘어서고 장기화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인도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 대북 ‘개발지원’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이다. 이 해는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 대해 15만 톤의 쌀을 무상지원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2005년 후반 북한은 그 동안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여러 단체에 대해 ‘인도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한국에서 ‘인도지원을 개발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으로 제기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북한 내부의 인도적 상황에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던 데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요구가 함축되어 있다. 동시에 한국의 대북 지원방식에 대한 비판과 개선의 요구도 한국 사회 내에서 증가했다. 한국 정부는 2002년 이후 북한정부에 40-50만 톤의 쌀 차관과 30-35만 톤의 무상 비료를 제공해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방식의 지원이 실제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이 증가했다. 특히 모니터링 요구가 증가했다. 아울러 북한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대북지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8년 말) 한국에서의 대북지원은 여전히 일반적으로 ‘인도지원’이라는 개념 속

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대북인도지원법’에 대한 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의 논의이다. 대북인도지원법에 대한 논의에서는 한국이 차관으로 제공하던 쌀을 무상으로 바꾸고, 그 대신에 지원량을 한시적으로 증가시키며 그리고 그 분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개발지원’이라는 발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08년 새로이 집권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로 내세운 ‘비핵·개방·3000’ 구상에도 ‘인도지원’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만, ‘개발지원’이라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그 ‘구상’의 구체적 내용에는 개발지원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북한경제가 살아서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도의 기본적 행복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개발지원의 기본발상과 일치한다.

본 협동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의 대북지원이 개발지원의 차원에서 행해지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년 연구사업의 1차년도 결과이다. 1차년도 연구는 국제적으로 개발지원과 관련한 이론과 실재를 개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개발원조라는 개념이 특히 한국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생소한 분야임을 감안한 것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대북지원은 개발원조를 주축으로서 진행해야 하며, 또한 국제협력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자면 한국정부와 민간은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적인 이론, 정책원칙, 실무 체계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협동연구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체계를 분석하고 북한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이 같은 1차년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북 개발지원에 대한 정책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개발지원과 관련한 이론과 실재를 개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개발원조라는 개념이 특히 한국의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생소한 분야임을 감안한 것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대북지원은 개발원조를 주축으로서 진행해야 하며, 또한 국제협력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그러자면 한국정부와 민간은 개발원조에 관한 국제적인 이론, 정책원칙, 실무 체계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협동연구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체계를 분석하고 북한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주요내용

1차년도의 본 연구는 모두 6가지 대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주제는 국제개발이론의 현황이다. 여기서는 국제개발이론의 역사적 변화, 개발이론의 핵심 주제인 빈곤과 빈곤퇴치에 관한 이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본 사회주의 체제전환이 다루어진다. 두 번째 주제는 국제원조체계의 현황이다. 여기서는 원조에 대한 여러 기본 개념,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과 실무원칙, 개발정책을 실행할 의지 또는 능력을 결핍한 취약국가에 대한 접근, 개발 시행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부패에 대한 대응책을 다룬다. 세 번째 주제는 유엔 기구의 대북활동이다. 여기서는 그간 유엔의 여러 기구가 북한에서 인도적 또는 개발 지원 차원에서 행한 활동을 서술 분석한다. 네 번째 주제는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이다. 주요 공여국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와 함께,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독일, 유럽연합, 스위스, 일본, 중국의 원조정책, 운용체계, 집행기관, 원조 실적, 대북지원 실적과 시사점을 다룬다. 다섯 번째 주제는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이다. 여기서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그룹,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개발지원 체계, 개발지원 원칙 및 전략에 대해 다룬다. 여섯 번째 주제는 국제개발 NGOs의 정책 및 활동 사례 연구이다. 국제개발 NGOs의 개념정의, 원조활동, 역사와 현황, 개발협력기구와 국제 NGOs, 국제 NGOs의 원조정책과 행동규범, 베트남과 중국에서의 국제 NGOs의 활동 사례,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다룬다.

## III 목차

###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 제2장 국제 개발이론 현황

1. 서 론
2. 개발 개념 및 이론 변화과정
3. 빈곤과 개발
4. 인간개발과 사회개발
5. 인권과 개발
6.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개발
7. 결 론

#### 제3장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1. 개발원조의 현황
2. 원조의 효과성
3. 건전한(good) 거버넌스와 반부패
4.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5. 분쟁 이후 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 PCR)

#### 제4장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1. 서언
2. UN의 구호 및 지원 활동에 대한 일반론
3. UN기구 단위별 지원체제와 원칙
4. UN기구의 대북 지원 과정과 현황
5. UN기구 프로그램별 대북 지원
6. 결론: UN기구의 대북 활동 평가와 시사점

#### 제5장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제와 활동

1. 머리말
2. 양자간 원조체제의 추진현황
3. 주요국의 ODA 운용체제
4. 결 론

#### 제6장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제 및 활동

1. 서 론
2. 대북개발지원 관련 국제기구 개요
3. 세계은행의 개발지원 체제 및 전략

4.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5. 유엔개발그룹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6.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개발지원 체계 및 전략
7. 체제전환국에 대한 국제개발기구의 개발지원 사례분석
8. 결 론

#### 제7장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동

1. 서 론
2. 국제 NGO와 원조 활동
3. 국제개발원조체제와 국제 NGO
4.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행동규범
5. 베트남·중국에서의 국제 NGO의 활동 사례
6. 결 론

#### 제8장 결론

1. 세부과제별 연구 요약
2. 1차년도 연구의 종합평가
3. 2차년도 연구를 위한 선행 작업: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시사점

### IV 정책건의와 시사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재를 기초로 국제 규범과 관례, 절차에 부합하는 북한개발협력의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선도적인 과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개발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화 단계 이전에 정부의 정책대안 마련과 국민적 공감대 및 학문적 담론 형성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개발 및 그와 관련한 국제협력 문제를 북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세부 개발이슈에 대한 후속적인 분석과 검토 과제를 파생해 내는 데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차별적 의의가 있다. 한국에 요구되는 주요 정책 과제는 이상적 상황이 도래하기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한국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신뢰부족으로 당국 간의 대규모 인도·개발 협력 사업이 성립할 수 없을 지라도,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신뢰구축, 경험축적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내의 NGOs와 지자체가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NGOs,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중소규모의 대북 인도·개발 지원성 사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중소규모의 인도·개발 지원성 사업은 궁극적으로 그 지속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호 신뢰구축, 경험 축적, 북한 실태 파악 등의 목적에서 얼마든지 가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향후 정부 당국간 관계에 의한 대규모 인도·개발지원 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의 개발협력에 관한 충분한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인도·개발 지원의 기본 개념이 어떠한지, 국제적 규범과 규칙이 어떠한지에 대해 한국의 조야와 북한당국에 대해 천명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설득 작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면 향후 실제 사업이 재개될 때, 한국 조야와 북한 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당국과 정책 협의 및 협력이 가능한 경우, 북한당국이 원하는 것에 맞추어 대규모의 인도·개발지원을 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반복하여 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의 복안은 가지고 있더라도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현지 사정과 북한 주민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인도·개발 지원의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한, 북한 당국과의 정책 협의와 협력이 보장되는 한, 민족적 이익의 차원에서 또한 지구적 관심사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개발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 동북아 4국에 대한 실용외교와 북핵문제



김국신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인곤 (기획조정실장), 배정호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병곤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위원),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국제질서재편 과정에서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제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용외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동북아 안보·경제정세의 특징을 살펴보고, 동북아 4국의 대북정책 및 한국과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일·외교 추진방향과 세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 필요성과 목적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외교정책에서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일본·중국·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비핵·개방·3000 구상’에 따라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을 선언하였다.

최근 국제정세는 지난 10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와 미국 오바마 민주당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G20 등 다자간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앞으로 국제 경제질서 재편에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정세변화에도 신속적으로 대응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질서재편 과정에서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제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용외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동북아 안보·경제정세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및 한국과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동북아 정세변화, 주변 4국과 남북한 관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미국의 신정부 출범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일·외교 추진방향과 세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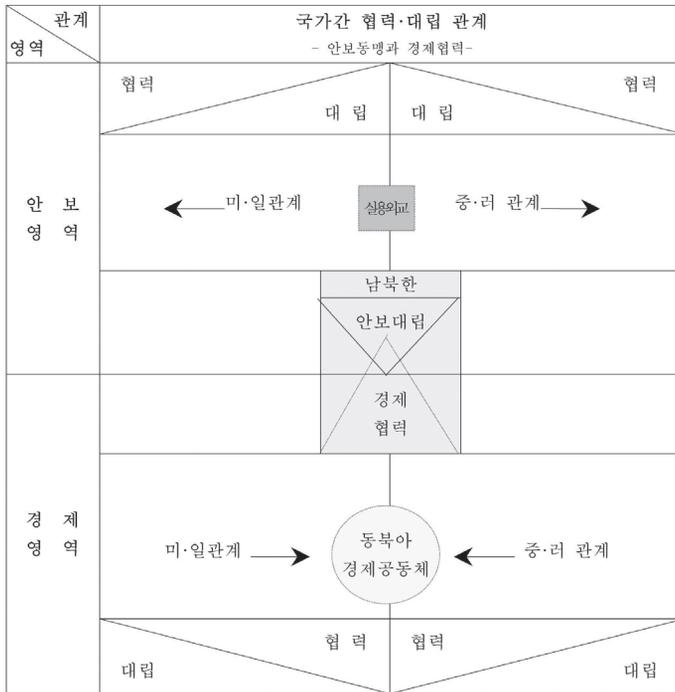
## II 주요내용

본 연구는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기본구도를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세계화,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등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전략 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외교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MB독트린』, 비핵·개방·3000 구상, 신한반도구상에 입각한 실용외교는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국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②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계에 기여하는 실용외교 전개, ③ 굳건한 선진안보체제 구축, ④ 품격있고 존중받는 국가 등의 구체적인 국정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4대 국정전략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제2부는 실용외교가 전개되는 국제환경인 21세기 동북아정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탈냉전기 국제관계는 이념적 대립이 감소됨에 따라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고조되었다. 그러나 세계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맞부딪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냉전의 잔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일 대 중·러 양축을 중심으로 느슨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동북아 4국은 일반적으로 남북한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방어(MD)체제

를 둘러싼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갈등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복잡다단한 갈등·협력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되는 실용외교는 <그림>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은 구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림> 동북아 갈등·협력 분석틀



이 기본구도는 먼저 동북아 정세를 크게 안보영역과 경제영역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협력과 대립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이 심화되어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안보영역에서는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양자 차원의 군사협력이 강화되어 지역전체 안보구도는 미·일 대 중·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불일치가 남북관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남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통합을 촉진시키는 한편, 안보차원에서 실용주의적인 균형외교를 전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폐기와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동북아정세 변화가 한반도 평화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북아 4국에 대한 외교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제3부는 미·일·중·러 4국의 대북정책 변화과정을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상세히 기술하였다. 제4부는 한국과 미·일·중·러 4국과의 관계를 외교·안보, 경제, 대북정책 공조 등 부문별로 협력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였다. 제5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실용외교 추진해 나갈 기본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 추진방안은 미·일·중·러 4국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III 목차

- I. 서론
- II.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기본구도
- III. 21세기 동북아정세의 특징
  - 1. 동북아 갈등·협력 분석틀
  - 2. 동북아지역의 군사·안보 구도
  - 3. 동북아 국가들의 외교적 협력과 갈등
  - 4. 동북아경제의 상호의존과 에너지 협력
- IV. 동북아 4국의 대북정책
  - 1. 미국의 대북정책
  - 2. 일본의 대북정책
  - 3. 중국의 대북정책
  - 4. 러시아의 대북정책
- V. 한국과 동북아 4국관계
  - 1. 한국과 미국관계
  - 2. 한국과 일본관계
  - 3. 한국과 중국관계
  - 4. 한국과 러시아관계

## Ⅵ. 실용외교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 실용외교 성과와 기본방향
2. 세부 추진방안

## Ⅶ. 결 론

### Ⅳ | 정책건의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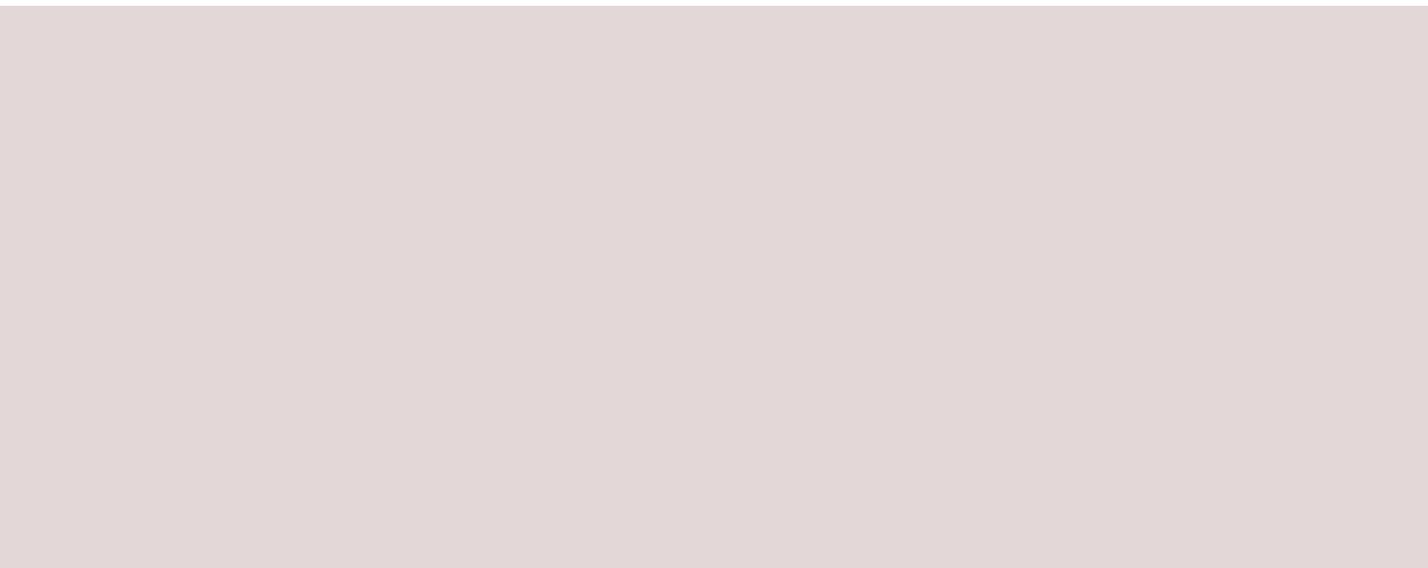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동북아 4국과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손실된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정립하였다. 또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도 강화하였다. 한국과 미·일·중·러 4국과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 구상에 입각하여 추진된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는 앞으로 국제경제질서 재편에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한국과 동북아 4국과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미 전략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확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일본·중국·러시아와의 협력관계도 더욱 확대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중관계가 개선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중 간의 안보협력도 보다 긴밀해 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 4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망을 확대·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유도하며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대화를 활성화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남북한이 상생·공영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북핵협상 과정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수시연구부문

수시분석보고서

동향분석보고서



# 수시분석보고서

KINU 정책연구 시리즈 | 통일정세분석보고서  
국·영문논총 | Studies Series | 학술회의 총서

## KINU 정책연구 시리즈

남북관계 주요 현안, 북한실태, 통일관련 대주변국관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중·단기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연구보고서

###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과 비핵·개방·3000 정책을 설명하고 이론적 체계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의 생존전략, 6자회담과 미국의 대북정책의 방향, 국제사회의 요구, 우리 국민을 대북정책에서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재해석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제사회에 편입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보편적인 길이었고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인식론적 기초이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이러한 보편적 세계사의 흐름에 북한을 편입시키고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제안이다.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의 추진 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데서 이 보고서는 출발한다. 이로 인한 안보불안, 경제난, 남한으로 부터의 흡수통일의 우려 등에서 온다고 보고 이를 감안한 대북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 I. 서론
- II.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내용 해석
  1. 정책의 명칭과 기초: 남북 상생·공영
  2. 정책의 수단: 비핵·개방·3000 정책
  3. 정책의 3대 목표
  4. 정책의 특징
- III.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1. 세계체제이론으로 본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의 궤적
  2. 변증법적 역사이론에서 본 변화의 궤적
- IV. 비핵·개방·3000 정책과 북한의 생존전략
  1. 북한 당국의 생존전략과 국제사회 편입 시도
  2. 북한경제의 변화 실태
  3. 북한사회의 변화 실태
- V. 비핵·개방·3000 정책과 북한핵문제 해결방안
  1.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핵개발의 근원 해소
  2. 6자회담 및 국제공조
  3.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 VI. 비핵·개방·3000 정책과 북한 개방화 방안
  1. 개방화의 의미: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2. 국제사회 정상적 일원으로 편입하는 길: 정상국가화
  3. 한국의 역할
- VII. 비핵·개방·3000 정책을 통한 북한 국민소득 3000 달러 실현 방안
  1. 핵협상과 남북경협 병행
  2.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국제환경 조성
  3. 대북 개발지원 5대 패키지 실행
- VIII.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조건과 한국의 지원 방안
  1. 국제금융기구와 북한의 경제재건
  2.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노력
  3.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조건

4.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
- Ⅸ.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방안
  1.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유도
  2.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방안
- X. 북한의 호응 전망
  1.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방공세의 배경
  2. 북한이 남북관계를 파국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배경
  3. 우리의 대응방향
- XI. 맺음말

## 2008-02 |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전성훈(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민(통일정책연구실장), 허문영(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향후 5년 남북관계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가 시나리오 기법이다. 여기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소개하고, 이 기법을 향후 5년의 남북관계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는데 활용한다.

향후 5년동안 남북관계의 전개에 가장 핵심적인 변동 요인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선정했다. 즉, 첫째,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즉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 또는 공화당의 맥케인 정부인가의 여부, 둘째,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의 여부. 두 요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 간 전개될 수 있는 남북관계 환경 및 전개와 관련하여 아래의 네 가지 시나리오가 상정되었다. 제1시나리오 <김정일과 춤을>: 오바마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제2시나리오 <동상이몽>: 오바마 정부 + 북한의 핵보유 고수, 제3시나리오 <활화산>: 맥케인 정부 + 북한의 핵 보유 고수, 제4시나리오 <부시 정책 녹화 재방송>: 맥케인 정부 + 북한의 비핵화 협력

- I. 서론
- II. 시나리오 기법의 내용

- Ⅲ.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
  - 1. 향후 5년 동북아 정세
  - 2. 향후 5년 남북관계
  - 3. 향후 5년 북한내부 정세
  - 4. 향후 5년 한국의 대내정치
- Ⅳ.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변수와 시나리오
  - 1. 주요 변수
  - 2. 시나리오별 전개 양상
- Ⅴ. 결론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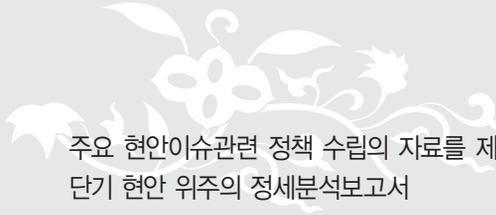
## 2008-03 |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 연구

최은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황재준(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기상분야는 정치가 아닌 과학과 환경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남북한 간의 기상협력은 그동안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기상협력을 당위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어떤 접점을 찾아 협력을 확대발전 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상 업무는 국가의 경제,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생산하고, 재해와 관련하여 시간을 다투는 공익 업무이며, 하루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국가 업무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기상인력 공백 상태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지속적인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방안의 모색은 물론 북한의 낙후된 기상관측·기술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일을 대비한 투자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는 일국적 차원이 아닌 전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이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며, 기상부문의 국제협력은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기상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해 남북한 기상협력의 방향을 도출하고, 북한 기상분야의 현실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남북협력을 포함해 보다 다각적인 국제협력에서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I. 서론
- II. 북한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특징
  - 1. 기상관리 정책의 목표와 기본 조직
  - 2. 북한의 기상관련 국제협력 실태
  - 3. 북한의 기상정책과 문제점
- III. 북한의 남북 기상협력정책과 남북한 기상관련 법령체계 비교
  - 1. 북한의 남북 기상협력 추진정책과 방향
  - 2. 북한의 기상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 3. 남한의 기상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 4. 남북한 기상관련 법령체계의 비교 및 평가
- IV. 바람직한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과 추진전략
  - 1. 남북한 기상업무 행정조직의 개편 방향
  - 2.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과 향후 과제
  - 3. 국제기구(WMO)를 통한 남북한 기상협력 추진
  - 4.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V. 결론
- VI. 부록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 (전문)
  - 2. 남북한 「기상법」의 내용 비교
  - 3. 남북한의 기상 및 천문 용어 비교

# 통일정세분석보고서



주요 현안이슈관련 정책 수립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북한, 남북관계, 주변국관계 주요 현황 등  
단기 현안 위주의 정세분석보고서

## 2008-01 |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 I. 개요
- II. 주요 내용 분석
  - 1. 2007년도 평가
  - 2. 2008년도 과업
- III. 전반적 평가 및 전망
  - 1. 전반적 평가
  - 2. 전망

〈부록〉 2008년 신년 공동사설

## 2008-02 |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 I. 문제제기
- II. 지도부 개편 결과 및 평가

1. 지도부 인선과 기구개편
2. 평가
- Ⅲ. 후진타오 집권2기의 대내외 정책 방향
  1. 대내정책 방향
  2. 대외정책 방향
- Ⅳ. 정책적 함의와 고려사항

## 2008-03 |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 I. 서론
- Ⅱ.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융합정책
  1. 권력기구간 철저한 상호견제
  2. 노·장·청 3합 구조
  3. 비공식 모임의 활용
  4. 정치적 탈락 활용
- Ⅲ. 최근 북한의 권력엘리트 변화 현황
  1. 노동당 주요 간부 변동
  2. 인민군 주요 간부 변동
  3. 내각 및 사회단체 주요 간부 변동
- Ⅳ. 대남 경협 라인의 변동과 그 의미
- V.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평가
  1. 분야별 권력엘리트의 세대 교체
  2. 국방위원회의 조직 강화
  3. 노동당 및 내각의 정상화 조짐
  4. 대남담당 부서에 대한 검열 및 재조직 완료
- Ⅵ. 정책적 고려사항

## 2008-04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 I. 문제제기
- II.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 1.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공조
  - 2. 한·미동맹 재조정
  -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4. 남북관계
- III. 정상회담 합의 내용 분석
  - 1. 합의 사안
  - 2. 성과와 의의
- IV. 정책적 고려사항

## 2008-05 |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 I. 문제제기
- II.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배경
  - 1. 독도 영유권, 과거사 문제에 의한 갈등의 한·일관계
  - 2. 고이즈미 총리의 퇴진과 한계속의 한·일관계 개선
- III.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1.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2. TBS 주최 ‘일본 국민과의 대화’와 과거사 문제
  - 3. 일본 언론들의 보도 및 반응
- IV. 한국의 전략적 고려 사항
  - 1. 일본측의 자극적인 언행에 대한 감성적 포퓰리즘 대응 자제
  - 2. 한·일 양국의 성숙된 역사의식 및 시민의식 함양

3. 균형있는 실질적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연구와 한국 국내 투자환경의 정비
4.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일 전략공동연구 심화
5. 서틀외교의 복원과 정상외교의 전략적 활용
6. 한·일관계의 양자간 차원이상에서 인식
7. 일본에 대한 심도 있는 국가전략 연구의 강화

### 2008-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 I. 서론
  - II. 내각의 2007년 사업정형과 2008년 과업
    1. 주요 내용
    2. 분석
  - III. 2007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
    1. 주요 내용
    2. 분석
  - IV. 종합평가
- 〈부록〉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회의, 4.9 만수대의사장에서 진행

### 2008-07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 I. 문제 제기
- II. 문타본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보고서의 구성
  2.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3. 의사소통(Communications)
  4. 권고사항(Recommendations)

### Ⅲ. 주요 특징 및 정책적 고려사항

1. 주요 특징
2. 정책적 고려사항

## 2008-08 |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 I. 서론
- II. 2단계 비핵화 평가
  1. 북·미 핵협상 실태
  2. 미국의 의도
  3. 북한의 의도
  4. 3단계 비핵화 협상 전망
- III. 북한의 대남 정책 전망
  1.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기본 태도
  2. 비핵화 2단계 완료가 북한의 대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IV. 정책적 고려사항
  1. 종합적 대북정책 구체화
  2. 북한 경제 상황 평가 및 대북지원 방안 모색
  3.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 2008-09 |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 I. 문제제기
- II.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성과
  1. 상봉·교류 규모 확대

2. 상봉·교류사업의 지속적 개선
  3. 상봉·교류 방식의 다양화
  4. 면회소 건설 및 상봉·교류의 제도화·정례화 기반 마련
  5.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 노력
  6. 여타 성과
- Ⅲ. 문제점
1. 북한의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
  2. 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정치적 영향
  3. 북한의 경제적 실리 추구하고 지원 유도 행태
  4. 정책수단 및 접근방식의 한계: '지원을 통한 설득'의 한계
  5. 국민적 관심과 이해 부족
- Ⅳ. 향후 정책 방안
1. 기본 방향
  2. 세부 방안

2008-10

##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최진욱

- I. 서론
- II. 대내동향
  1. 정치분야
  2. 경제분야
  3. 군사분야
  4. 사회·문화·교육 분야
- III. 대외동향
  1. 핵문제
  2. 대외관계
- IV. 대남동향

1.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
  2. 촛불시위 선동 및 평승
  3. 통미봉남
  4.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발생과 북한의 태도
- V. 종합 평가
1. 식량난에 대한 당국 차원의 대책마련 부심
  2. 대남 비방공세의 유형과 의미
  3. 생존전략의 변화: 대외관계 다각화
  4.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발생의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

2008-11

##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 I. 문제제기
- II. 아소정권의 등장 배경
  1. 후쿠다 총리의 전격 사임
  2. 자민당의 침체 탈피 전략과 총재 경선
  3. 총리선거와 중의원 결정 우선주의
- III. 아소 정권의 출범과 특징
  1. 아소 총리의 출범과 국민평가
  2. 아소 정권의 특징
- IV. 아소정권의 대외전략노선과 대북전략
  1. 대외전략노선
  2. 대북전략
- V. 전략적 고려사항
  1. 아소 정권의 한계와 총선 후 정계 재편의 가능성
  2. 일본 정치권에 대한 전략외교 및 한·미·일 공조강화

- I. 문제제기
- II. 정상회담 개최 배경
  1. 양국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2. 이명박 정부 출범 전후의 양자관계 발전
  3. 최근 양국 간 갈등 해소의 필요성
- III.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1.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의 격상
  2. 다양한 분야의 양자 협력 확대
  3.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4. 남북대화의 중요성 확인
- IV. 정상회담 평가
  1. 미래지향적 대러 관계 확립
  2. 북핵문제 해결의 공감대 유지
  3. 호혜적 실용외교 추진
  4.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 V. 정책적 고려사항

## 통일정책연구(국문논총)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영문논총)

북한실태, 한반도의 주변정세, 통일정책에 관한 국내외 북한·통일문제 전문가·학자들의  
정책 지향적 연구논문을 수록하는 연 2회 발간 전문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국문논총, 등재후보 학술지: 영문논총)

### 제17권 제1호

#### ■ 기획논문

-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 추진방향 / 조 민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북핵문제 해결의 전략 / 서재진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 새로운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 최진욱
- 북한경제의 국제화와 신정부의 대북정책 정립방향 : 부동산과 인력자원의 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 배종렬

#### ■ 일반논문

-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국 지방외교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 고경민
- 남한과 북한의 교사양성 과정 비교 연구 / 김병찬
- 이행기 사회주의 경제에서 인민들의 생존기술 : 1990년대 이후 쿠바와 북한의 사례 / 신석호
- 월북자와 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문제 / 김성욱
- 이북문학의 정치적 종속화에 관한 연구 : '종자'와 '대작'을 중심으로 / 남원진
- 중국의 대 북한 인식변화 연구 : 북한전문가 심층 면담조사 / 신상진

- 법이론과 법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한 새터민 이혼소송 / 양천수
- 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 장형수
- 북한의 '차등적 식량 분배 모형' 과 2008년 식량위기 / 김보근
- 북한의 관료부패와 지배구조의 변동 :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를 중심으로 / 김종욱
- 남북한 평화증진을 위한 접경지역의 협력적 이용방안/ 김홍배·김영봉

### 제17권 제2호

- '비핵·개방·3000' 하 남북경협 해법으로서 자원공동개발 / 홍성국
-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 진전과 중국의 입장 / 박병광
- 중소분쟁 시기 북한과 북베트남의 자주외교 비교 / 이상숙
- 구매력평가이론에 근거한 북한 가격 및 환율 분석 / 문성민
- 북한이탈주민의 소득 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년 패널 연구 / 유시은·엄진섭·윤덕룡·전우택
- 김정일 시대(1998~2007) 북한당국의 통일담론 분석: 노동신문 구호를 중심으로 / 김석향·권혜진
- '진달래' 이 미지의 변화와 그 의미: 북한 시에 나타난 '진달래' 를 중심으로 / 이상숙
- 통일연구 방법론 소고: 동향, 쟁점 그리고 과제 / 김학성

### Vol. 17, No. 1

-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Views from Tokyo and Pyongyang / Anthony DiFilippo
- South Korea's Paradigm Shift in North Korean Policy and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Japan, and Korea / Sachio Nakato
- "A Turn to the Right?" A Russian Comment on the North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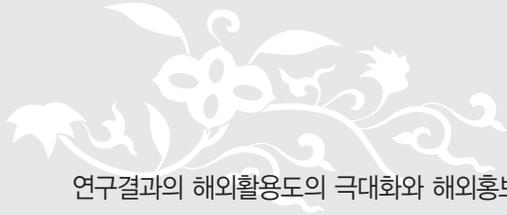
Policy of ROK Conservative Government / Georgy Toloraya

- US Security Challenges in Northeast Asia After Bush / Richard Weitz

**Vol. 17, No. 2**

- The Next U.S. Administration and its Policies toward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Perspective / Wu Chunsi
- Obama's Asia Policy: A Look Back at the Presidential Race to Understand America's Next Steps in Asia / Dennis Shorts & Vincent Min
- Prospects for the U.S.-DPRK Normalization and Economic Transition Effects / Eul-Chul Lim
- New Geo-economic Thinking on North Korea in Japan / Masahiro Matsumura
- A Contextual Analysis of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Negotiations / Sang-Hyun Park

# Studies Series



연구결과의 해외활용도의 극대화과 해외홍보를 위하여 발간하는 연구총서의 영역보고서

2008-01

##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I. Introduction
- II. The DPRK's conceptions of democracy
  1.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2. On socialist democracy
  3. On liberal democracy
- III. The DPRK's conceptions of human rights
  1. On 'our style human rights'
  2. On human rights of liberal democracy
  3. On the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 IV. The DPRK's conceptions of the spread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 On the promotion of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society
    - A. The DPRK's criticism against the 'human rights offensive'
    - B. Human rights as a sovereign right or a right of a nation

- C. Cultural relativism, globalization and ‘our style human rights’
- D. The fairness of the United Nation
- 2. On the proliferation of democracy
  - A. A strategy for the regime change in the DPRK
  - B. The war on terror and the ‘color revolution’
  - C. Globalization strategy
  - D. The US strategy towards the DPRK
- V. The DPRK’s responses and the ROK’s future policy goals on human rights in the DPRK
  - 1. The DPRK’s responses
  - 2. Policy goals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2008-02

##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I. Introduction
- II. Perceptions of the Internal System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Units
  - 1. Perceptions of Kim Jong-il: the ‘Suryong Leader Views’
  - 2. Perceptions of Regime Preservation: “Suryong (Leader) System”
  - 3. The KPA’s own Recognition: “Chosen Military Recognition”
  - 4. Perceptions toward the Labor Party: “Military-First by the Party”
  - 5. KPA’s perceptions of the State and the Major Values of the State
  - 6. Perceptions toward the Enemies of the Regime
- III. Perceptions of the Change in World Political Affairs

1. General Perceptions of the World: Socialist DPRK vs. Imperialist U.S
2. Perceptions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U.S., North Korea–Japan and North–South Korea
3. Perceptions of ‘Enemies’ and ‘Peace’
- IV. KPA’s Internal Situation
  1. Realities of Military Service
  2. Military Exercise
  3. Military Discipline and Mores
  4. Military Preparedness
- V. Concluding remarks

## 2008-03 | PSI and the South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I. Purpose of Study
- II. Background, Goals and Development of the PSI
  1. Background
  2. Goals
  3. Origin and Development
- III. A Three–Dimensional Analysis of the PSI
  1. Tailored Containment
  2. Coercive Diplomacy
  3. Aggressive Deterrence
- IV. Level of Participation and Gains and Losses
  1. Non–participation
  2. Full–Scale Participation
  3. Partial Participation
- V. South Korea’s Policy Directions

1. A Separation Strategy Based on North Korea's Behaviors
2. Full-Participation of PSI
3. Observing the No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2008-04

##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and Kang, Han-Koo

- I. Introduction
- II.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Its Development
  1. Negotiations for the Realignment of the U.S.-Japan Alliance
  2. Toward U.S.-Japan Alliance Development
- III.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1. Conflict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A. Strengthening of Arms Race in Northeast Asia
    - B. Four Major Powers' Pragmatic Diplomacy
  2.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 A. Coordination and Confrontation over North Korean Nuclear Issue
    - B. Rearrangement of the USFK and the ROK-U.S. Alliance
- IV.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1. Basic Concepts
  2. Keynotes of Security Plan
    - A. A Realistic Recognition Toward the U.S.-Japan Alliance
    - B. Development of Pragmatic Diplomacy
    - C.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Enhancement of Military Posture
    - D. Building a Peace Regime Through Four-party Talks

- E. Development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 V. Conclusion

## 2008-05 |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I. Introduction
- II. Changes in the Ruling Ideology and Power Structure
  - 1. The Combination of Military-first Ideology and Practical Socialism: The Possible Advent of Military-first Pragmatism
  - 2. The Continuation and Change of the Sole Leadership (suryong) System
  - 3. The Decline of the Party's Functions and Power,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ilitary-first Politics<sup>11</sup>
  - 4. The Generational Shifts
  - 5. The Heir to the Helm: The Attributes of the One-man Ruling System and How it Combines with the Collective Ruling System
- III. Changes in the Economic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 1. The Theory of the New Institutionalism and the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 2. The Economic Crisi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North Korea
  - 3. The Changes in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 after the 7.1 Measures
- IV. Changes in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s and Their Mentality
  - 1. Changes in the Lives of the North Koreans
  - 2. Changes in Mentality of the North Koreans
- V. Changes in Educational Policy and the State of Education

1. The Deterioration of Public Education and its Privatization
  2. The Advent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Gifted & Talented Education
  3. The ‘Modernization’ of Education and the Expansion of Corruption
- VI. Conclusion

2008-06

##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I. Introduction
- II. The Regression of Socialist Regime Resilience
  1. Paralysis of the Socialist System Functions
  2. Loss of Regime Legitimacy
  3. The Unrest of the Cadres’ Confidence Toward the Regime
  4. Poor Functions of Physical Constraints
- III. The Creation of New Regime Adaptability
  1. The Creation of a New Mode of Production: Primitive Market Economy and Household Industry
  2. The Formation of a New Economy Management System: Segmentation Economy and Crony Economy
  3. The Formation of a New View of Values
  4. The Formation of a New Order: The Second Society’s Order
- IV. Variables of Contingencies and Regime Sustainability
  1. Low Possibility of Contingencies
  2. Possibility of Contingencies through Reform and Openness
  3. Paradox of Reform and Openness
- V. Comprehensive Evaluations of Regime Sustainability
- VI. Conclusions

# 학술회의 총서

북한 및 통일관련 주요이슈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내학술회의, 국제학술회의, 워크숍 발표 및 토론 요지를 수록한 결과보고서

## 2008-01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 제1부 총론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형성배경과 정책목표 /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 대북포용정책과 상생공영정책의 비교: 도전과 전략적 선택  
/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핵·개방·3000 구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평화와 협력을 향한 도약  
/ 조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제2부 외교·안보: 비핵화 및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 평화와 협력을 위한 외교의 방향과 과제: ‘실용외교’의 실천  
/ 박영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 북핵폐기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핵문제 본질과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방향  
/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3부 남북경제공동체: 북한 개방과 정상국가화

- 북한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판단과 대북정책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협력 추진 방안  
/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 개방과 국제협력 / 김규륜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실장)

### 제4부 남북주민 행복추구: 북한 개발과 북한주민 삶의 질 향상

- 북한의 경제현실과 발전방향/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인권: 개방과 삶의 질 향상  
/ 이금순·김수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연구위원)
- 대북정책과 국민통합 방안 /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2008-02

##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 Opening Remarks

Jae Jean Suh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eynote Speech

Signific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Ha Joong Kim (Minister of Unification)

### Session 1 :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 The United States, Korea, and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William B. Brown (Professorial Lecture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Japan's Vision for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Takashi Inoguchi (Professor, Chuo University)
- DPRK Nuclear Crisis in the Changing Northeast Asian Environment  
Zhenqiang Pan (Executive Councilor, China Reform Forum)
- Russia's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Alexander Panov (Rector, Diplomatic Academ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Summary of Discussion  
Choon Gun Lee (Research Director, Institute for Future Korea)  
Kook Shin Kim (Senior Research Fellow, KINU)  
Ho Sup Kim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Jung Ho Bae (Senior Research Fellow, KINU)  
Heung Ho Moon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Choon Heum Choi (Senior Research Fellow, KINU)  
Tae Ik Chung (Adjunct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of North Korea Studies)  
Eun Sook Chung (Senior Fellow, Sejong Institute)

## Session 2 :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Vision for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Vision for East Asia and Its "Pragmatic Diplomacy"  
Young Ho Park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KINU)
- Institutionalizing North Korean Reform and Opening: Vision 3000  
Chan Bong Park (Former Deputy Minister and Senior Delegate to Inter Korean Dialogue, Ministry of 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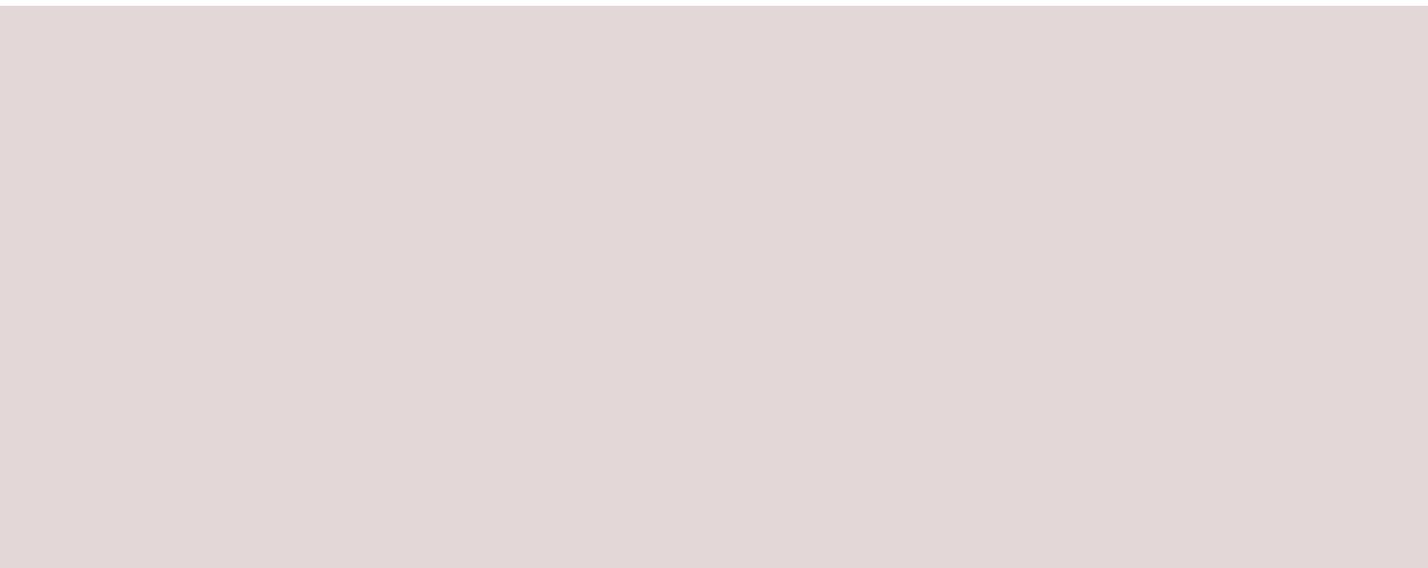
- Summary of Discussion

Hae Sung Chun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Unification)

Duk Min Yun (Professor,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Ho Yeol Yoo (Professor, Korea University)

Kyu Ryon Kim (Senior Research Fellow, KIN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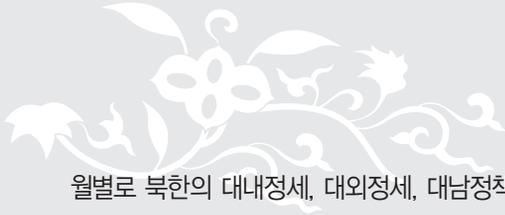
# 동향분석보고서

월간 북한동향 | KINU Insight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온라인정세분석 | 주간 통일정세

---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2008)



월별로 북한의 대내정세, 대외정세, 대남정책 동향을 정리

제2권 제1호: 북한의 2008년 1-2월 동향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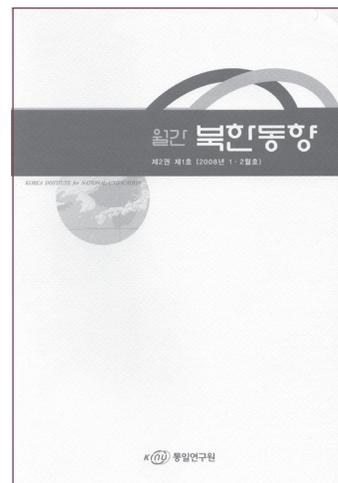
제2권 제2호: 북한의 2008년 3-4월 동향을 정리

제2권 제3호: 북한의 2008년 5-6월 동향을 정리

제2권 제4호: 북한의 2008년 7-8월 동향을 정리

제2권 제5호: 북한의 2008년 9-10월 동향을 정리

제2권 제6호: 북한의 2008년 11-12월 동향을 정리



# KINU Insight



계간으로 발행되는 KINU Insight는 북한 및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최근 이슈들을 심층분석

## 08-04

- North Korean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 Kim Sung-han
- Perspective Evaluation of the North's South Korean Policy / Choi, Jinwook
- Nuclear Crisis and the Six-Party Talks / Cheon, Seongwhun
- North Korea Statistics
- Internal Affairs on North Korea

## 08-05

- Features and Significance of the Coordination System for North Korean Polic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 Jun, Bong-Geun
- The New York Philharmonic Performance in Pyongyang and the North's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 Hyun, Seong-il



- Some Thoughts on Lee Myung-bak's Policy towards the DPRK: A Chinese View / Pan Zhenqiang
- North Korea Statistics
- Internal Affairs on North Korea

#### 08-06

- Visions and Tasks of the ROK-U.S. Strategic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 Yun, Duk Min
- Inter-Korean Relations after South Korea-U.S. Summit / Park, Jongchul
- The Reformation of North Korean Higher Education: Current Trends and Prospects / Cho, Jeong-Ah
- North Korea Statistics
- Internal Affairs on North Korea

#### 08-07

- What is the Real Cause of North Korea's Food Crisis? / Lee, Suk
-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 Kim, Young-Yoon
- Paradigm Change of North Korea Policy from Engagement to Pragmatism: Focusing on Seven Points / Park, Jongchul
- North Korea Statistics
- Internal Affairs on North Korea

#### 08-08

- Implications of the Expanding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 Choi, Soo Young
- Prospects for the Korea-China Strategic Partnership and North

Korea / Choi, Choon Heum

-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as a Strategy for Issue Linkage / Hong, Woo Taek
- North Korea Statistics
- Internal Affairs on North Korea

**08-09**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Peninsula

- Global Strategy / Cho, Min
- Northeast Asian Strategy / Hwang, Byung-Duck
- The Korean Peninsula / Park, Hyeong-Jung
- North Korean Nuclear Issue / Cheon, Seongwhun
- South Korea-U.S. Relations / Park, Young-Ho
- Inter-Korean Relations / Park, Jong-Chul
- North Korean Response / Chon, Hyun-Joon
- U.S.-North Korea Relations / Choi, Jinwook
- North Korean Human Rights / Kim, Soo-Am
- Internal Affairs on North Korea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제3권 1호(2008)

국제사회의 동향, 북한의 대응, 인도주의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대북인권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분석 및 평가를 수록

## 제2권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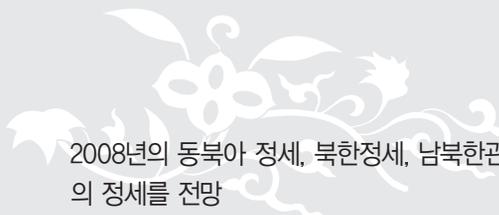
- I. 국제사회 동향
  1. 개별국가
  2. 유엔
  3. NGO
  4. 분석 및 평가
- II.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2. 일본에 대한 반응
  3. 유엔에 대한 반응
  4. 남한에 대한 반응
  5. 분석 및 평가
- III.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2. 납북자·국군포로
  3. 이산가족
  4. 분석 및 평가

## 제3권 1호

- I. 국제사회 동향
  1. 개별국가
  2. 유엔
  3. NGO
  4. 분석 및 평가
- II.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2. 일본에 대한 반응
  3. 유엔에 대한 반응
  4. 남한에 대한 반응
  5. 분석 및 평가
- III.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2. 납북자·국군포로
  3. 이산가족
  4. 분석 및 평가

연례정세보고서 2008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2008년의 동북아 정세, 북한정세, 남북한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09년의 정세를 전망

## I. 동북아정세

### 1. 동북아 안보정세

- 가. 미국과 일본의 국내정세와 대외정책
- 나.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세와 대외정책
- 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적 협력과 갈등
- 라. 전망

### 2. 북핵문제

### 3. 한국의 주요 대외관계

- 가. 한미관계
- 나. 한중관계
- 다. 한일관계
- 라. 한러관계

## II. 북한정세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
- 라. 군사동향

### 2. 주요 대외관계

- 가. 북미관계

### 나. 북중관계

- 다. 북일관계
- 라. 북러관계

### 3. 대남동향 : 체제유지를 위한 通美封南, 通民封官

## III. 남북한관계

### 1. 남북대화

- 가. 남북 정상회담 및 장관급회담
- 나. 남북대화 전망
- 다. 경제분야회담
- 라. 군사분야회담

### 2. 남북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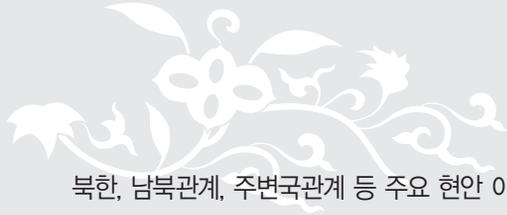
- 가. 경제분야
- 나. 사회·문화분야

### 3. 인도주의 사안

- 가. 대북지원
- 나. 이산가족문제
- 다. 북한이탈주민문제
- 라. 북한인권

부록: 2008년 주요 사건일지

# 온라인정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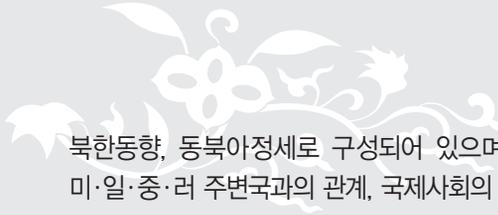
북한, 남북관계, 주변국관계 등 주요 현안 이슈관련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현안분석보고서

- |         |                                    |              |
|---------|------------------------------------|--------------|
| 2008-01 | 2008 북한신년 공동사설 분석                  | 북한연구실        |
| 2008-02 | 북핵, 오케스트라 선율을 타는가                  | 조민           |
| 2008-03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 전망         | 서재진          |
| 2008-04 |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일 협력’ 국제학술회의 참가후기 | 배정호          |
| 2008-05 | 평화협정체결 논의의 새로운 동향                  | 이규창          |
| 2008-06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 최진욱          |
| 2008-07 | 재중 탈북자 보호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이규창          |
| 2008-08 | ‘비핵·개방·3000’ 과 북한의 핵포기             | 홍우택          |
| 2008-09 | 북한의 의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 최진욱          |
| 2008-10 | 북한 핵문제 현황과 전망: 북·미 ‘잠정합의’ 를 넘어     | 조민, 최진욱, 박형중 |
| 2008-11 | 한·미정상의 해법: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병행    | 박종철          |
| 2008-12 | 이명박-부시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남북관계          | 박영호          |
| 2008-13 |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              | 배정호          |
| 2008-14 | 비핵화 2단계 완료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 최진욱, 조민, 박형중 |
| 2008-15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과 중·일 정상회담         | 배정호          |
| 2008-16 | 2008년 5월 한·중 베이징 정상회담 평가           | 최춘흠          |
| 2008-17 |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상생과 공영을            | 박영호          |

2008-18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대통령의 결단	김영운
2008-19	정부수립 60주년,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진욱
2008-20	이명박-부시 제3차 정상회담 결과와 대북정책	박영호
2008-21	북-러 두만강 국경선 재설정 협의와 북방영토 문제	이규창
2008-22	북한의 남북선박 충돌사건 해결에 대한 단상(斷想)	조민
2008-23	한·중 서울 정상회담(8·25) 평가	최춘흠
2008-24	북한 외무성대변인 성명의 의미	전성훈
2008-25	북한 “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의 배경과 향후 전망	조민, 박형중
2008-26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과 대책	이금순
2008-27	북한정권 수립 60주년: 과거, 현재, 미래	전현준
2008-28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향후 대한반도 정책	김국신
2008-29	미국 대선과 공화·민주 양당의 동북아 정책	박형중
2008-30	김정일의 9.9절 불참과 향후 북한체제 전망	북한연구실
2008-31	김정일 정권 향방에 따른 중국의 선택	전병곤
2008-32	김정일 와병설 이후 대북정책 방향	박종철
2008-33	북한 군부는 김정일 정권의 독(毒)인가 약(藥)인가?	정영태
2008-34	남북대화로 10.4선언의 이행방안 마련해야	박종철
2008-35	아소정권의 대외정책노선과 대북정책	배정호
2008-36	한·러 정상합의와 남북협력	조한범
2008-37	기로에 선 북핵 문제	최진욱
2008-38	조선노동당 창건 63주년과 오늘의 북한	전현준
2008-39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6자회담 전망	박영호
2008-40	부시 대통령이 퇴임 전에 답해야 할 질문	전성훈
2008-41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남북관계 풀 수 있는 好機다	조민
2008-42	북한의 ‘남북관계 전면 차단’ 위협 배경과 향후 전망	임강택
2008-43	금융위기의 국제정치적 파장과 한반도	박형중
2008-44	차기 미국 민주당 정부와 북한문제	박형중
2008-45	‘남한판 일심단결’이 필요한 때이다.	전현준
2008-46	세계경제침체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충격	박형중

- 2008-47 1. 오바마 행정부의 세계전략 전망: 오바마의 미국, 희망의 메시지인가  
조민
- 2008-48 2.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전략 전망  
황병덕
- 2008-49 3.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박형중
- 2008-50 4.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전성훈
- 2008-51 5. 오바마 행정부의 대한 정책과 한·미관계 전망  
박영호
- 2008-52 6.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종철
- 2008-53 7.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 2008-54 8.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 전망  
김수암
- 2008-5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미 정책 전망  
전현준
- 2008-56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통행 제한과 개성공단  
김영운
- 2008-57 북한 외무성 시료채취 거부 담화의 의미와 파장  
전성훈
- 2008-58 북한의 동시다발적 강경조치의 의도와 대책  
박종철
- 2008-59 금강산 관광 10년의 의미  
김영운
- 2008-60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의의와 영향  
김수암
- 2008-61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대미 '군사 및 핵외교' 전략  
정영태
- 2008-62 대북 뼈라 살포의 정치적 함의와 우리의 정책 방향  
홍우택
- 2008-63 북한의 '위기조성(crisis making)' 전술과 우리의 대응  
전현준
- 2008-64 '12·1 개성 사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  
박종철
- 2008-65 '12·1 개성 사태'의 법적 문제와 평화적 해결  
이규창
- 2008-66 '12·1 개성 사태'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강동완
- 2008-67 '12·1 개성 사태'와 남북경협 방향  
최수영
- 2008-68 남북관계의 경색: 북한의 의도와 한국의 대응  
박형중
- 2008-69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해야 한다  
전성훈
- 2008-70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국민협약' 제언  
조한범
- 2008-71 중국 개혁개방 30년과 북한  
전병곤
- 2008-72 2006년 이래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과 장성택:  
2009년의 북한을 바라보며  
박형중

# 주간 통일정세



북한동향, 동북아정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대내외정세, 대남정책 동향과 대북한 관련 미·일·중·러 주변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의 동향을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정리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관련
- 마. 사회·문화 관련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3. 대남정세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나. 미·북 관계

### 다. 중·북 관계

### 라. 일·북 관계

### 마.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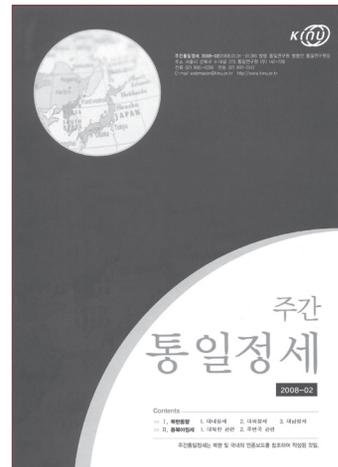
### 2. 주변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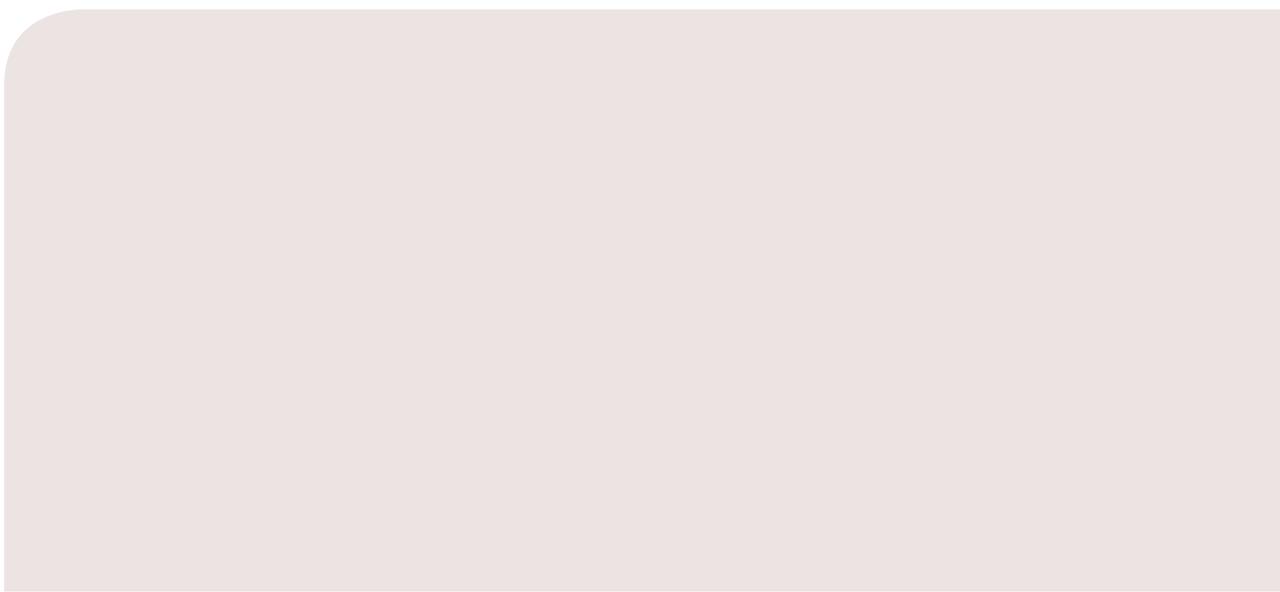
### 가. 한·미 관계

### 나. 한·중 관계

### 다. 한·일 관계

### 라. 기타





# 3

## 2008년도 연구관련사업

국내학술회의 | 국제학술회의 | 국내외워크숍 | KINU 라운드테이블  
초청세미나 및 자문회의 | 해외전문가 방문간담회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국내학술회의

일시	행사명	주제
2.21	통일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경협 발전방안
3.12	특별기획 통일연구원-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정책 추진방향
4.18	개원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2008년 남북관계의 진단과 과제
5.21	통일연구원-인천발전연구원 공동학술회의	남북협력 전망과 인천의 비전
5.22 ~23	권역별 학술회의(호남권)	이명박정부 출범과 통일 환경-대4강 외교와 협력을 중심으로
6.3	학술회의	향후 5년 북한체제의 안정성
7.11	철원군 연계 남북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가 학술회의	접경지역 남북관광 활성화 방안: 철원군 중심
7.18	건국60주년 기념 통일 심포지엄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9.11	학술회의	향후 1년 북한의 대남대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10.24	한국정치학회 추계 공동학술회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제적 공조방안
11.6	학술회의	북한 권력구조 변화 전망
11.7~8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회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추진과제
11.10	현대경제연구원, 서울대평화통일연구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정세전망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12.2	美신정부 출범관련 학술회의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
12.4	북한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한반도, 전환기의 사색
12.23	남북협력포럼 출범기념 학술회의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색

## 국제학술회의

일시	행사명	주제
1.21~24	한일 국제학술회의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일협력
1.23~26	한중 국제학술회의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중협력 방안
1.29 ~2.3	한미 국제학술회의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2.13	한러 국제학술회의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한·러 협력방안
8.10 ~17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통일전 동서독 관계,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유럽통합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집중 토론
9.9~10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1세기 동아시아의 비전과 한반도, 미일중러와 한반도
12.5	Scientist Redirection(핵과학자전환 프로그램) 서울 라운드테이블	The Six Party Talks, and Scientist Redirection: Result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ort

## 국내외워크숍

일시	주제	참석자
1.15	신정부 대북정책 방향	원장, 박영호, 전병곤, 이규창, 조민, 허문영, 전성훈, 손기웅, 김규륜, 박형중, 임강택, 황병덕, 전성훈, 최진욱, 정영태, 최수영, 이교덕, 임순희, 조정아, 최춘흠, 김국신, 배정호, 홍우택 이금순, 김수암(이상 통일연구원)
1.28	Overview of Thinking Concepts	허문영, 전성훈, 손기웅, 박형중, 이규창, 김인숙(이상 통일연구원)
2.12	향후 5년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주요변인 설정	허문영, 박형중, 전성훈, 이규창, 홍우택, 김인숙(이상 통일연구원)
2.15	2008 사업추진 방안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연구혁신 방안 간부진의 역할과 책임	원장, 박영호, 허문영, 김규륜, 정영태, 여인곤, 서재진, 조한범, 김국신, 손기웅, 윤청룡 외 2명(이상 통일연구원)
3.28	과거 대북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평가	임강택, 김규륜, 박형중, 조한범, 정재은(이상 통일연구원),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영훈(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29	2008년도 사업추진방향, 2009년도 사업 계획 및 연구원 발전방향 논의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희 대기자(중앙일보), 박원철 변호사(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손병두 (서강대학교 총장), 이상우 총장(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장청수(한국정책개발원 원장), 오지철(한국관광공사 사장), 현정은(현대그룹 회장), 김영수 감사(서강대학교), 이봉조(통일연구원장), 여인곤, 조민, 김규륜, 서재진, 박영호, 이금순, 조한범, 김영윤, 윤청룡, 이규창, 이찬희, 손지숙(이상 통일연구원)
4.30	향후 5년 남북관계 관련 주요 영향 요인, 전개양상과 정책 대응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이우영(북한대학원대),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최종철(국방대), 신상진(광운대), 임을출(북한대학원대), 홍규덕(숙명여대), 김명섭(연세대), 김도태(충북대), 김석우(평화협력원),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조동호(이화여대), 오일환(한양대), 이희옥(성균관대), 정낙근(여의도연구소), 김덕중(경기대), 김병로(서울대), 허문영, 조민, 박형중, 전성훈(이상 통일연구원)
5.7	비핵화2단계 완료 이후 북미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조민, 박형중, 최진욱, 김인숙(이상 통일연구원)
5.8	「비핵·개방·3000 구상」 해설서 작성 관련	조민, 서재진, 박영호, 김규륜, 박종철, 박형중, 허문영, 이금순 (이상 통일연구원)

일시	주제	참석자
5.14	향후 5년 남북관계 2차 Workshop - 향후 5년 남북관계 시나리오	신상진(광운대), 정성장(세종연구소),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오일환(한양대), 이희옥(성균관대),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김덕중(경기대), 김병로(서울대), 최종철(국방대), 조 민, 허문영, 박형중, 전성훈, 최진욱, 김인숙(이상 통일연구원)
5.21	대북지원 추진방안	이금순, 조민, 김수암, 이규창 외 5명(이상 통일연구원)
5.22	북한인권연구회 운영방안	이원웅(관동대학교 교수), 박흥순(선문대학교 교수), 손현진(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사무관), 이금순(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조 민,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서은성(이상 통일연구원)
6.16	이명박 정부 100일과 북한개발협력의 과제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문천상(아시아재단), 최창용(극동문제연구소), 김정수(통일부 인도협력국), 홍익표(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석진(산업연구원), 임강택, 김규륜, 김수암, 백미경(이상 통일연구원)
6.18~ 24	최근의 동북아 전략구도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방향	박영호,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최수영, 이은정(이상 통일연구원)
6.24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장형수(한양대학교),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임강택, 김규륜, 박형중, 조한범, 정재은(이상 통일연구원)
6.24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김규륜, 임강택, 박형중, 조한범, 허문영(이상 통일연구원), 장형수(한양대학교),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무라 미즈히로(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진저(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 스탈리치코프 알렉세이(러시아 국립극동대학교)
6.29 ~7.4	한미관계, 북한 문제 및 동북아 안보	박영호, 서재진, 최춘흠(이상 통일연구원)
7.15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김도태(충북대학교), 이동휘(외교안보연구원), 이상준(국통연구원), 장형수(한양대학교), 김주진(KT통신망연구소),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김규륜, 김일한(인턴), 정재은(이상 통일연구원)
7.2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김규륜, 임강택, 박형중, 허문영, 정재은(이상 통일연구원)
8.6	「북한인권 DB 구축」 관련 프로그램 개발	김수암(연구위원) 외 5명(이상 통일연구원)
8.8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장형수(한양대) 외 5명(이상 통일연구원)
8.8	남북관광교류협력과 신변 안전조치 확보 방안	김영봉(국토연구원), 제성호(중앙대학교),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원동욱(한국교통연구원),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동성(경기개발연구원),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양현모(한국행정연구원) 외 20명

일시	주제	참석자
9.3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이중주(통일부), 이동휘(외교안보연구원),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외 5명
9.10 ~ 11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 방안	장형수(한양대),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김석진(산업연구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외 5명
9.11	개방·3000 구상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방안	김도태(충북대),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장형수(한양대), 김주진(KT 통신망연구소),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윤재영(한국전기연구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일한(동국대) 외 10명
9.11	대북정책 추진의 국제적 환경 분석 및 활용방안	김도태(충북대),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김주진(KT통신망연구소),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외 5명
9.19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유재익(이상 통일연구원), 이동휘, 전봉근(이상 외교안보연구원),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최용환(경기개발연구원) 외 10명
9.24	대북정책 추진의 국제적 환경 분석 및 활용방안	전재성(서울대), 손병권(중앙대), 신상진(광운대), 조동준(서울시립대) 외 10명
9.25	남북협력 전문가포럼 운영방안	김규륜, 임강택, 박병인, 정재은(이상 통일연구원), 강성윤(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김근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영봉(국토연구원), 김철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조원(중앙대), 김범석(연세대 통일연구원),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등
9.30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조민, 박형중, 전현준, 최춘흠, 허문영, 배정호(이상 통일연구원), 김근식(경남대), 유호열(고려대), 유동렬(치안정책연구소), 정낙근(여의도연구소), 백학순(세종연구소), 정육식(평화네트워크), 김도태(충북대), 전봉근(외안연), 고유환(동국대), 손광주(데일리NK), 양문수(북한대학원대),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소),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박찬봉(한나라당), 김용현(동국대), 한용섭(국방대), 강태호(한겨레), 제성호(중앙대), 이대근(경향신문), 문흥호(한양대) 외 10명
10.2	미국내 북한인권 NGO 동향	이원웅(관동대학교 교수), 박홍순(선문대학교 교수), 서창록(고려대학교 교수), 김정수(초청연구위원), 손현진, 김미옥(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사무관), 이금순(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조 민, 박영호, 전현준,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서은성, 김혜경(이상 통일연구원)
10.9	개방·3000 구상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방안	김도태(충북대),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장형수(한양대), 김주진(KT통신망연구소),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규륜, 김지현(이상 통일연구원) 등

일시	주제	참석자
10.9	개방·3000 구상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방안	김도태(충북대),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장형수(한양대), 김주진(KT 통신망연구소),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윤재영(한국전기연구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일한(동국대) 외 10명
10.30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해소 및 국가역량 결집 방안	김용현(동국대), 박찬봉(성균관대), 손광주(데일리 NK), 김근식(경남대학교),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외 10명
11.12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반도 문제	이상현(세종연구소), 박인휘(이화여대), 황지환(명지대), 이인호(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춘근(미래연구원), 유호열(고려대),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차두현(한국국방연구원), 최 강(외교안보연구원), 최종철(국방대학교) 외 15명
11.18	개방·3000 구상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방안	이상준(국토연구원), 김주진(KT 통신망연구소),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윤재영(한국전기연구원),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김일한(동국대) 외 5명
11.18	개방·3000 구상의 체계적 추진 및 실현방안	김도태(충북대),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이상준(국토연구원), 장형수(한양대), 김주진(KT통신망연구소), 안병민(한국교통연구원),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규륜, 김지현(이상 통일연구원) 외 10명
11.22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통계 체계화 사업 추진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김형기(한국외국어대학교),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외 10명
11.24	선진한국 건설과 통일대비 역량강화 방안	이수훈(경남대), 권원순(한국외대),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최종철(국방대), 조동호(이화여대), 조봉현(기업은행경제연구소), 나희승(철도기술연구원), 오규열(서울디지털대), 이상환(한국외대), 홍현익(세종연구소) 외 15명
11.26	통일연구원 하반기 고문단 회의	김영희(중앙일보 대기자), 박원철(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찬모(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별보좌관), 배규한(국민대 교수), 유장희(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상만(중앙대 교수), 이상우(한림국제대학원대 총장), 홍두승(서울대 교수) 외 15명
12.9	남북협력기금 평가모델 개발 (사회·인도 분야)	조상민(한국농촌공사 사장), 유원섭(울지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진숙(보건복지부 국제협력팀 사무관), 권태진(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혜영(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외 8명
12.10	SI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탈북자 인권 실태 조사 현황	Rajiv Narayan(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조사 담당관), 박홍순(선문대학교 교수), 김정수(초청연구위원), 손현진(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사무관) 외 8명
12.12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유호열(고려대), 고유환(동국대), 백승주(KIDA), 서주석(KIDA), 김용현(동국대), 박찬봉(성균관대), 손광주(데일리 NK), 김근식(경남대학교),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이수훈(경남대학교), 권원순(외대),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외 12명

## KINU 라운드테이블

구분	일자	초청자	주제
제11차 KINU 라운드테이블	2.27	에반스 리비어 (Korea Society 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미대사)	최근 미북관계
제12차 KINU 라운드테이블	3.11	송민순(前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 핵문제 현황과 향후 전망
제13차 KINU 라운드테이블	5.20	이수혁(前 6자회담 대표)	북핵문제 협상 과정과 전망
제14차 KINU 라운드테이블	9.17	강인덕(전 통일부장관)	통일연구 과제

## 초청세미나 및 자문회의

일시	주제	자문자
1.4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	차이젠(푸단대학 교수)
1.30	한국 신정부 출범과 한·일관계 전망	미야모토 사토루(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1.31	북한이해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1.31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방향	박승재(대륙전략연구소 이사)
2.1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협력 방안	박승제 박사(대륙전략연구소 이사)
2.14	기본과제 관련 사업추진 방안	이종근(한국무역협회 북한교역팀 수석연구원), 동명한(중소기업진흥공단 북한사업팀장), 조봉현(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14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김창범(외통부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
2.20	신정부의 대북정책	페터 빈클러(독일대사관 정무 참사) 외 2인
2.27	Comparing poverty reduction/ development assistance policies of western donor agencies	Lynn Lee(Intermedia Project Manager), 김규륜, 박형중, 임강택, 임순희, 김하영, 정재은(이상 통일연구원)
2.28	미래연구와 미래예측방법론	최항섭(정보통신정책연구원)
3.12	망분리사업 방안 협의	김창현(통일부)
3.21	남북경협 현장경험과 시사점	김무태(전 평화자동차총회사 총사장)
3.25	남북경협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향	곽수환(태림산업 부회장), 김정태((주)안동대마방직 회장), 김형기((사)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상근부회장), 서승우(나우코포레이션(주) 사장), 서창녕((주)아사달 대표), 유완영(유니코텍코리아 회장), 정양근((주)태림산업 회장), 최원호((주)맛대로춘닭 사장)
3.27	미래연구 현황과 방법	이정민, 서용석(KT 경영연구소 미래연구센터 선임연구원)
4.4	복잡계 개론 소개	윤영수(삼성경제연구소)
4.8	통일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자문회의	정창현(국민대)
4.8	최근 북한정세	Mats Foyer(現 주북한스웨덴 대사), Paul Beijer(前 주북한스웨덴 대사), Britta Kinnemark(공사 정무담당)
4.17	주한·주일 미군 기지이전 및 비용분담 문제	강한구(한국국방연구원)

일시	주제	자문자
4.17	남북교역 DB화 및 분석체계 개선방안	이종근(한국무역협회), 고화섭(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교역지원과)
4.23	한반도 통일 및 평화외교의 역사, 추진방안 등	김계동(국가정보대학원)
4.24	북한의 대내외 정책변화 전망	김진환(동국대)
4.25	통일정책 거버넌스 공고화 방안	이유진(숙명여대)
4.25	통일대비연구 1: 북한 붕괴시 초기 대책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석(한국개발연구원), 김연수(국방대학교), 조재섭(통일부)
4.28	남북 사회문화협력 추진방향	정현곤(민화협)
4.30	북한의 대남태세 동향	김동엽(국방부)
5.2	북·러 경제관계 현황과 쟁점, 전망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5.9	통일대비 연구	김연수(국방대학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5.9	오늘의 세계 어떻게 볼 것인가?	조명진(EU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위원)
5.9	중국 18대 당대회 이후 대내외 정책 변화와 한반도	Dr. Zhan Debin 교수(Fudan Univ.)
5.14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 및 과제	고경빈(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장)
5.15	한반도 통일 및 평화 외교의 개념과 실태	김영호 교수(국방대학교)
5.16	통일대비연구 - 중앙아시아 국가의 체제전환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	박상남(한신대)
5.20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최명해(외교안보연구원)
5.21	남북교역 통계	이종근(한국무역협회)
5.22	통일부-통일연구원 정책협의	김천식(통일부 통일정책국장)
5.22	통일대비 : 북한 붕괴 상황 및 대책	김갑식(경남대),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6.2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패전후 국가재건 과정	서정민(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김연수(국방대학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6.3	새터민 정착지원 현황	전승호(통일부 정착지원과 과장)
6.18	UNESCAP와 북한이슈	남상민(UNESCAP 환경담당관)
6.27	중국의 동북3성 지역개발과 북중관계	김철 박사(중국 요녕사회과학원)
7.11	New Strategic Thinking on North Korea in Japan	Masahiro MATSUMURA(St. Andrew's University in Osaka)

일시	주제	자문자
7.14	국제대책-대미, 대중정책 중심	김창수(국방연구원), 김흥규(외교안보연구원), 김연수(국방대학교)
7.15	최근 남북관계와 중국	권병현(전 주중한국대사)
7.17	동북아 군사안보 현황	이규열(한국국방연구원)
7.22	최근 북미관계와 북한동향	박한식(미 조지아대학교)
7.23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고려사항	김근식(경남대), 김계동(국가정보대학원)
7.24	중국 대외 정책과 미중관계	주 평(북경대 국제관계대학원)
8.5	통일대비 연구: 북한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찬규(경희대 명예교수), 김연수(국방대학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8.6	국제네트워크 분석방법	김형민(연세대 통일연구원)
8.20	통일대비 연구: 북한체제 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진무(KIDA), 김연수(국방대학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8.20	한중 FTA의 정치경제적 함의	정환우(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8.27	미국의 WMD정책과 북핵문제 해법(The Global Problem of Non-Proliferation Including Ending North Korean Proliferation)	Dr. Jeffrey Lewis(New America Foundation),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 등
8.29	사회주의 체제전환이론의 최근 동향	김병연(서울대)
9.5	동북아 국가들의 대북전략	유호열(고려대학교), 문흥호(한양대학교), 안병준(KDI국제정책대학원), 이상우(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9.9.	새정부대북경제협력 구상 구체화 방안	길태근(「한국의 비전21」 이사)
9.10	북한 DB 프로그램 개발	엄홍석(Mercycorps)
9.10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제도의 특성과 한계	박재만(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사무관)
9.12	한중 FTA와 정치경제적 함의와 대응방향	홍익표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9.18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중북 사회문화교류 관계 전망	서정경(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9.26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	김동수, 최준성(이상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0.2	대미 통일외교의 경험과 문제점 및 보완방안	최상철(통일부)

일시	주제	자문자
10.8	남북경협협의회(포럼 및 단체) 활동 현황	이종근(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
10.20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추진전략 1	김근식(경남대)
10.21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추진전략 2	홍순직(현대경제연구원)
10.31	테러지원국해제 이후 6자회담 추진 대응방향	양영대(전 무역회사 사장(새터민))
10.31	테러지원국 해제관련 논의	양○○(전 무역회사 사장)
11.5	최근 북한 상황과 중국의 입장	김강일(중국 연변대)
11.12	북한급변 사태 중국의 입장과 전략	김흥규 박사(외교안보연구원)
11.13	오바마 정부 출범과 남북 및 한미관계 발전 방향	김응택(미 드렉슬대학교)
11.19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길영환(아이오대)
11.20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전망	김철(전 북한무역회사 사장)
11.20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북미핵문제 타결	김도일(새터민)
11.26	북한급변 사태	오충석 과장(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11.27	개성관광 중지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양영대(새터민)
11.27	잘짜기터 인권침해 기록보존소 사례와 시사점	Ulrich Blum, Hans Juergen Grageman (독일 전문가)
12.18	북미관계 대한 북한의 인식	법륜스님(좋은벗들)

## 해외전문가 방원간담회

일시	방문인사
3.25	Nicola Kim(캐나다 대사관 정치담당 서기관) 및 캐나다 대사관 일행
4.21	David W. Moyer(미국대사관 정치과 이등서기관) 일행
4.30	Thierry Meyrat(ICRC 동아시아지역대표단 단장), Gerard Besson(ICRC 평양지부 부장), 한윤경(대한적십자사 협력담당관) 일행
5.29	호주 국방정보기구 대표단 방원 일행
6.16	Mr. Walid Choucair 총괄국장(레바논 알하야트지) 일행
6.26	파키스탄 국립경영대학 일행
8.28	스웨덴 ISDP 일행 방원
10.23	독일 외교관 일행
10.30	중남미 기자 일행, 최진욱
12.9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니카이 히로유키 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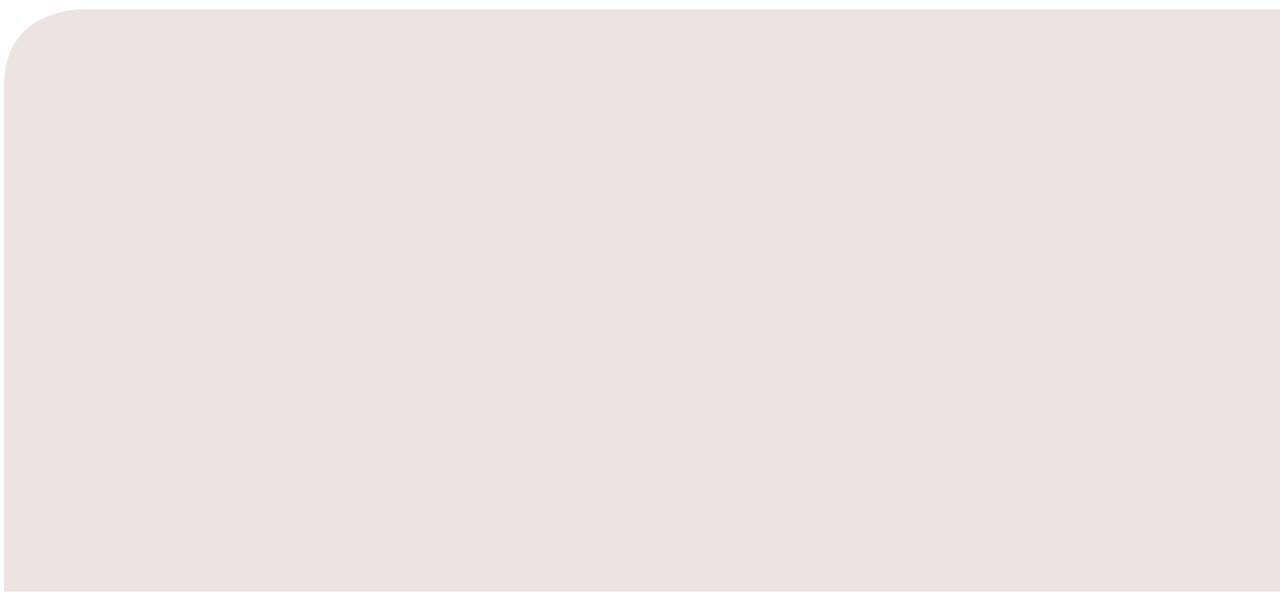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www.tongmoon.or.kr

1998년 통일연구원은 북한·통일문제관련 유관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북한 실태연구 및 통일정책 개발을 위한 허브로서의 소임을 담당하고자 「통일문제연구협의회」를 창설하였다. 2008년말 현재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30개 국책연구기관과 세종연구소, 국방대학교,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등 10개 민간 사회연구단체가 참여하여 북한·통일관련 연구방향과 과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관련 정보자료와 연구실적을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통일의식 함양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권역별 공동학술회의를 비롯한 각종 학술행사를 산·학·연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학술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통일분야 연구자의 연구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참여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도 서비스하고 있다.







# 4

## 부록

2008년도 발간물 목록 | 2009년도 사업계획 | 2009년도 연구위원 현황

## 2008년도 발간물 목록

### 연구총서

-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방안 연구 김영운 저
-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저
-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 학술회의총서

-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통일연구원

### 협동연구총서

-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 (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공저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1 (2008)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7, No. 2 (2008)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	이금순 외 공저

### 독일통일백서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통일연구원
------	-------------	-------

###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	-----------------------------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 KINU정책연구시리즈

-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인문적 체계: 연구  
서재진
-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 월간 북한동향

-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 Studies Series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Seongwhun Cheo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년도 사업계획

부문	연구과제
통일정책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통일 추진방향</li> <li>- 통일대비연구(II): 북한 급변사태시 중장기 통합정책</li> <li>- 통일이후 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북한지역 토지를 중심으로</li> <li>-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li> </ul>
남북협력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경제 변동 시나리오별 남북경협 추진전략</li> <li>-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li> </ul>
북한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국가역량 평가 연구</li> <li>- 북한의 개방화 연구</li> </ul>
국제관계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II)</li> <li>- 세계경제 위기와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li> <li>- 21세기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li> <li>- 북한체제 전환과정과 국제사회의 협력방안</li> </ul>
북한인권연구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인권백서: 인권침해 구조와 개선전략</li> </ul>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협동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개발 자원의 포괄적 추진방안</li> <li>-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li> <li>- 비핵·개방·3000 구상: 상황별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li> <li>-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전략과 통일환경 변화</li> </ul>
일반정책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남북경협 확대 연계 추진 심화방안</li> <li>- 접경지역의 평화시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li> <li>-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 방안</li> <li>- 통일 예측 시계 구축</li> </ul>

# 2009년도 연구위원 현황

(실·소장 외 가나다순)

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전공
기획 조정실	김규륜	실장	02-901-2592 krkim@kinu.or.kr	남북한 교류·협력, 동아시아지역 국제관계, 아태지역의 무역관계, 국제정치경제론
	이규창	연구기획· 성과관리팀장	02-901-2664 kchrhee@kinu.or.kr	남북관계법, 평화법제, 국제법, 북한법
통일정책 연구센터	조민	소장	02-901-2612 chomin@kinu.or.kr	통일정책, 남북관계, 평화사상, 평화체제
	박종철	선임연구위원	02-901-2533 pjc@kinu.or.kr	동북아 안보, 남북한 협력,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한 군비통제
	손기웅	선임연구위원	02-901-2629 songw@kinu.or.kr	평화(안보) 및 환경문제, 통일정책, 남북한 교류·협력, 남북한 군사문제
	허문영	선임연구위원	02-901-2583 myhuh@kinu.or.kr	북한정치·외교 및 대남정책,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국제관계
남북협력 연구센터	박형중	소장	02-901-2588 dpblue@kinu.or.kr	북한정치, 북한경제, 남북관계, 비교사회주의, 한·미관계
	김영윤	선임연구위원	02-901-2568 yykim@kinu.or.kr	북한경제, 남북한 경제통합, 독일통일사례, 남북경협
	임강택	선임연구위원	02-901-2579 ktlim@kinu.or.kr	북한의 대외무역, 북한의 경제정책,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경협, 동북아 경제협력
	전성훈	선임연구위원	02-901-2571 swc339@kinu.or.kr	통일·외교, 국제안보, WMD 비확산과 남북한 군비통제, 지역안보와 통일전략
	황병덕	선임연구위원	02-901-2567 hbd@kinu.or.kr	남북관계, 독일통일, 통일이념, 통일한국의 이념과 통일한국의 미래상
북한연구 센터	최진욱	소장	02-901-2558 choij@kinu.or.kr	북한정치 및 행정, 북·미관계, 재외동포
	이교덕	선임연구위원	02-901-2599 kd227@kinu.or.kr	북한정치·외교, 북·일관계, 북한후계체제
	임순희	선임연구위원	02-901-2594 lsh@kinu.or.kr	북한사회·문화, 북한여성 및 청소년, 북한종교,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
	전현준	선임연구위원	02-901-2585 hjchon@kinu.or.kr	북한 권력 엘리트, 정치체제, 대남정책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02-901-2578 jeung@kinu.or.kr	북한 군사체계, 북한 당·군관계, 북한 미사일 핵 정책
	조정아	연구위원	02-901-2590 orlando@kinu.or.kr	북한교육, 통일교육, 북한사회·문화, 북한노동
	최수영	선임연구위원	02-901-2581 sychoi@kinu.or.kr	북한경제, 도시 및 지역경제, 남북경협, 동북아 경제협력

부서	성명	직위	연락처	전공
국제관계 연구센터	배정호	소장	02-901-2616 jhbae@kinu.or.kr	일본정치·외교, 동북아 국제정치, 한국정치·외교, 전략문제
	김국신	선임연구위원	02-901-2569 kskim@kinu.or.kr	미국과 북한관계, 한·미 안보협력, 미국의 동북아 정책, 국가통합이론
	여인곤	선임연구위원	02-901-2596 ikyeo@kinu.or.kr	러시아 정치·외교, 동북아 안보, 독일통일문제
	전병곤	연구위원	02-901-2573 jubykon@kinu.or.kr	중국정치, 동북아 국제관계, 북·중관계
	최춘흠	선임연구위원	02-901-2595 chchoi@kinu.or.kr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중·북관계, 한·중관계), 중국의 대미·일·러 전략, 중·대만관계, 중국의 국내정치
북한인권 연구센터	박영호	소장	02-901-2570 youngho@kinu.or.kr	대북정책, 통일정책, 북한정치·외교·안보, 남·북/북·미/한·미관계, 미국외교·안보 정책, 북한인권
	김수암	연구위원	02-901-2563 sakim@kinu.or.kr	북한인권, 대북지원
	이금순	선임연구위원	02-901-2593 kslee@kinu.or.kr	인도적 지원, 탈북자 정책, 재난관리, 북한인권
	홍우택	연구위원	02-901-2562 hong3579@kinu.or.kr	전쟁 및 협력, 국제협상, 핵억지, 통일정책, 북한인권
통일학술 정보센터	조한범	소장	02-901-2611 hbcho@kinu.or.kr	남북사회·문화 교류·협력, 사회주의 체제전환, 러시아 지역연구